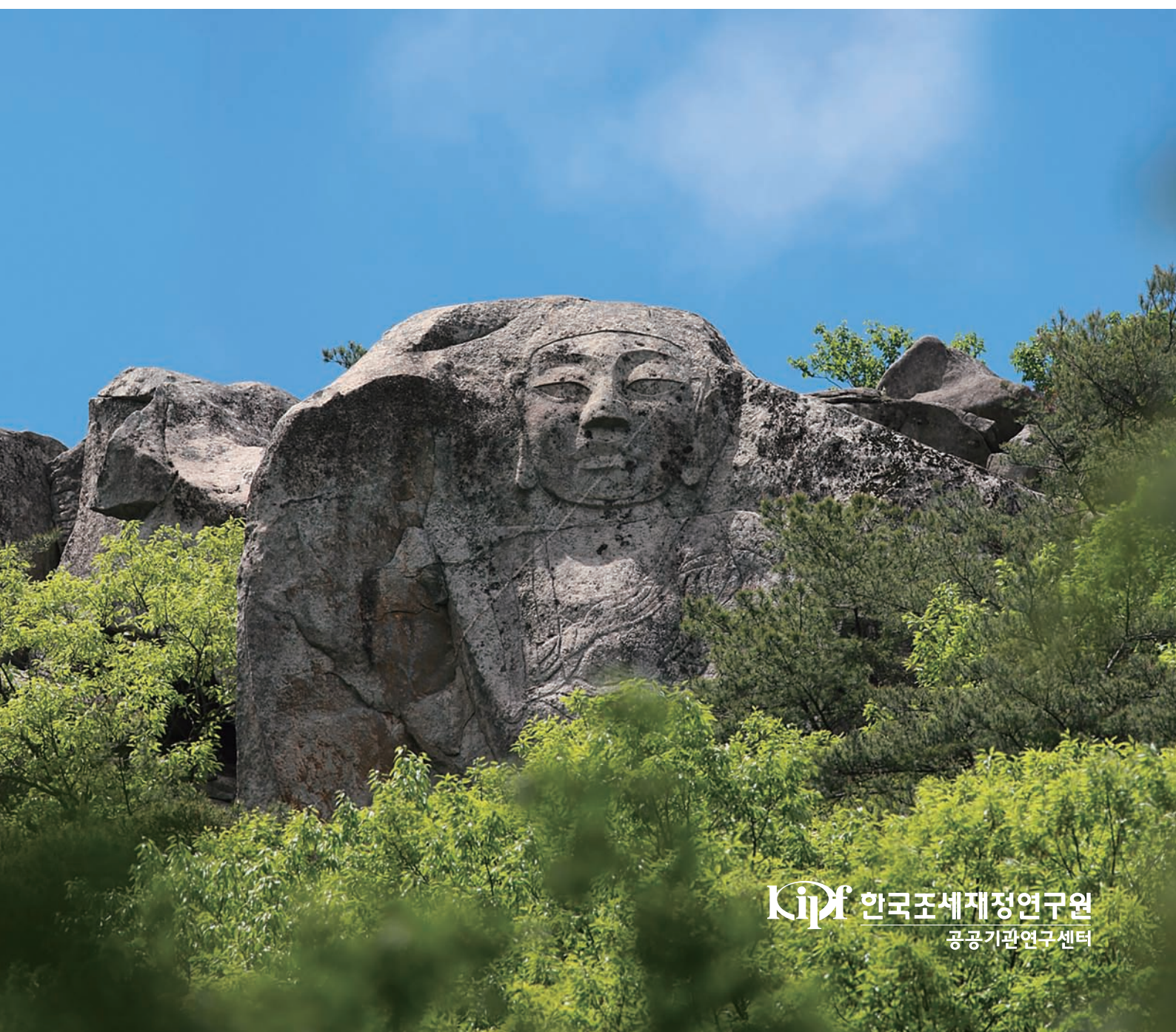


공공경제

2023 SPRING Vol.13

기획특집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혁신도시 박람회 강원 혁신도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를 꿈꾸다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또한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은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경쟁에서 밀리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나, 공공기관은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직·인력이 비대해지고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②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통해 ① 기능, ② 조직·인력, ③ 예산, ④ 자산, ⑤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2.8% 조정(△12,442명), 경상경비 1.1조원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14.5조원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조정, 경영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 34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관한 전면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하여 4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하였고,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에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계획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인사·조직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직무급 운영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기관과 직무급 운영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우수사례집 발간, 현장소통 강화 등 직무급 도입과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하여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인사·조직 관리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무에 기반한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 개방 직위 확대 등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CONTENTS

공공경제

2023 SPRING Vol.13



표지 이야기

원주8경 중 제8경 미륵산 미륵불상으로, 미륵산 정상 미륵봉 바위 벼랑에 미륵불상이 새겨져 있다. (출처: 원주시청)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소병욱, 이부연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 화	(044) 414-2431
이메일	soe@kipf.re.kr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 0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창(窓)’: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개편안
최우석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장
- 12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배성호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5 전문가VIEW II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 Round Table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이번 「공공경제」
Vol.13은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TALK



28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32 Trend Focus
한국의 RE100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김중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연구위원

36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통합연차보고 체계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40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엔데믹 시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항공산업
신가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조정실장

48 혁신이야기 I_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플랫폼 활용한 발전량 예측으로
에너지 혁신 선도

50 혁신이야기 II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장애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노후가옥 개선 사업

54 CEO인터뷰 I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60 CEO인터뷰 II
보증, 그 이상!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 거듭나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66 혁신도시 박람회
강원 혁신도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를 꿈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2 잡(JOB)담 I
중소기업은행
배명민 중소기업은행 인사부 차장

76 잡(JOB)담 II
기술보증기금
서경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대리

80 나의 취업성공기 I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 사다리
강민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재경영팀 전임연구원

83 나의 취업성공기 II
지역인재 채용,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
김하람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주임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정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정책리포트’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 VIEW’에서는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 정보 공개제도의 변천 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을 고민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책리포트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창(窓)’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개편안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전문가VIEW II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Round Table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창(窓)'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개편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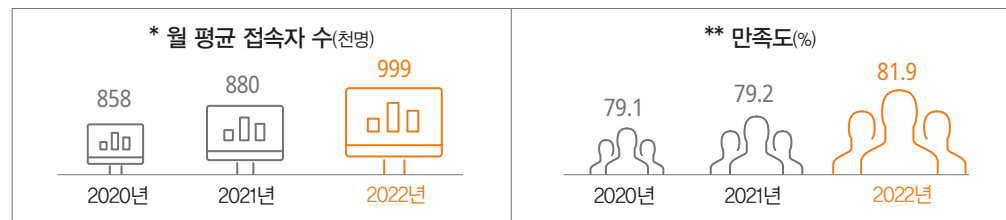


최우석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장

들어가며

2007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다. 당초 27개였던 공시항목은 2023년 현재 41개에 이른다. 2013년 공시 점검 제도 도입, 2015년 민간 전자공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DART) 방식의 공시 실시, 정부 부처들의 외부 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해 통합공시제도는 공시항목을 넓히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왔다.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ALIO) 접속자 수는 계속 증가해 월 평균 약 100만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만족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통합공시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보자.

공시항목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

이번 발표에 따라 공시항목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분류체계 개편은 2007년 통합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개편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성장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공시항목들이 도입되다 보니, 기존의 체계에서는 분류가 애매한 공시항목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이 공시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① 기존에 5개였던 대항목을 4개의 대분류로 재편하며 'ESG 운영' 항목을 추가했고, ② 기존 10개였던 중분류를 15개로 세분해 공시정보의 가독성을 높였다.



그림 1
통합공시 분류체계
개편안

▶ **현행** 대항목(5개) - 항목(41개) - 세항목(99개) - 세세항목(126개)
▶ **개편** 대분류(4개) - 중분류(15개) - 항목(46개) - 세항목(98개) - 세세항목(1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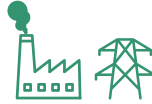

현행		개편안				
대항목(5개)	항목(41개)	대분류(4개)	중분류(15개)	항목(46개)		
I. 일반현황 (총 1개)	일반현황 1개	I. 기관운영 (총 16개)	일반현황	일반현황, 내부 규정 2개		
	II. 기관운영 (총 20개)		임직원 수, 신규 채용,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 환경보호, 인권경영, 일가정양립 제도, 소송 및 법률자문 등 20개	인력관리	임직원 수, 임원현황, 신규 채용 등 7개	
III. 주요 사업 및 경영 성과 (총 13개)			재무상태표, 손익계약서, 감사보고서, 투자 및 집행 현황,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13개	보수관리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3개	
			IV. 대내외 평가 (총 5개)	경영평가, 동반성장 평가, 청렴도 평가,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 5개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그 밖에 복리후생제도 2개
				V. 정보공개 (총 2개)	계약 정보, 연구보고서 2개	노동조합
			소송 및 자문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1개	
		II. ESG운영 (총 12개)	ESG 현황	ESG 경영현황 1개		
			E(환경)	환경보호(온실가스, 녹색구매 실적 등 세항목 7개) 1개		
			S(사회)	인전관리, 인권경영, 장애인 고용률 등 7개		
		III. 경영 성과 (총 13개)	G(지배구조)	이사회 회의록, 자체 감사부서 현황 등 3개		
			재무 성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7개		
		IV. 대내외 평가 등 (총 5개)	사업 및 투자	주요 사업, 투자집행 내역 등 3개		
			중장기 재무관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3개		
			대내외 평가	경영평가,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 3개		
			정보공개	계약 정보, 연구보고서 2개		

ESG 공시 강화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2년 3월 일반 및 기후 분야 공시의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ESG 공시의 국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개편에서는 ESG 관련 항목을 보강했다.

우선 ① 환경(E)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현재 Scope 1·2 까지 공시하던 것을 Scope 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2
온실가스 감축 실적 기준

구분	Scope 1 (직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Scope 3 (기타 간접배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시설(협력사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예시	화석연료(보일러, 화로 등), 운송수단, 기타 화학 공정 등	전력·전기·열·물 사용, 폐기물	임대한 자산, 프랜차이즈, 판매된 생산품과 용역의 이용, 아웃소싱 활동, 폐기물 처분 등

또한 ②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에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비상임 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항목 등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③ ‘ESG 경영현황’ 항목을 도입해 경영보고서 형태로 ESG 경영목표 및 전략, 추진체계와 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ESG 공시 확대가 기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① Scope 3 공시의 경우, 국제 공시기준이 마련되어 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반영될 때까지 자율 공시항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자율 공시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② ESG 경영현황 공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202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의 반영



이번 개편안에는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우선, ①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성별근로공시제(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단계별로 성비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와 관련해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 비율’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②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도 도입했다. ‘복리후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관이 자체점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공시 점검 제도의 개선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시 점검 일부 제도도 보완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공시오류, 지연공시, 미공시 등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① 노무·재무 항목 점검을 넘어 종합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공시 점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② 별점 부과기준 중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중과실’의 의미를 구체화했고, ③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의 지정요건이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각각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했다.

<p>중과실의 의미(현행)</p>  <p>공시오류로 공시항목의 의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p>	<p>개선</p>  <p>공시 담당자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오류(오기, 수치 오류, 중요사항 누락 등)로 공시항목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내용 변경, 기초사실의 왜곡 등)</p>
---	--

나가며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은 2023년 통합공시 내용에 반영되어 공시될 것이다.

통합공시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창’과 같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배성호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공기관 회계의 중요성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관련 회계처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계처리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 ‘이상한 회계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겪고 있는 난방비 폭탄의 원인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손익성과가 우수한데도, 배당하지 않기로 하여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회계처리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우선, 가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원가가 3원인 가스를 3원에 판매하는 상황에서 LNG 국제수급 불균형으로 원가가 1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¹⁾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때 정부가 인상안을 거부하면 증가한 원가 7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7원은 향후 가스 가격이 안정되면 정부 허락을 받아 가스 판매가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결국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원가 증가분을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 것이 세간의 논란이 된 것이다.

복식부기의 관점에서 추가 해석을 해보자. 한국가스공사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증가한 원가 7원을 어떻게든 지급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공기업 특성상 여유자금을 넉넉히 보유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추가 차입을 하여 지급할 것이다. 결국 7원이라는 원가 증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신, 미수금,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택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회계처리 논란은 공공기관 영역에서도 회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회계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회계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은 드물다. 사실 공공기관의 회계는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물가 수준을 좌우하는 등 일반국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서는 마치 공기와 같은 존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공기관²⁾에게도 회계는 중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반대로 LNG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원가가 3원에서 1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가스요금 인하안을 거부한다면 감소한 원가 2원만큼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향후 가스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2)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직원 규모, 총수입액, 자체 수입액,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면 기획재정부에 의한 관리를 받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주무부처에 의한 관리를 받는다. 따라서 회계변수에 따라 관리주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기관에게 회계는 중요하다.

둘째,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영역 중 경영관리-계량지표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들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아가 새정부의 향후 경영평가에서는 재무 성과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 예정이므로 성과측정의 기준이 되는 회계가 당연히 중요하다.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이미 국가 또는 영리기업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 또는 일관된 측정방식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³⁾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계투명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회계가 투명하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진실한 회계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 하나는 ‘내부의 진실한 회계정보’이며 또 하나는 ‘그대로 전달’이다. 이러한 회계투명성 개념을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투영해 보자. 공공기관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진실한 회계정보’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수한 회계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기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하지만, 기관마다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령 및 기금회계 등이 재무제표 수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민간기업보다 재무제표 작성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교육, 순환보직으로 인한 회계직의 특별 관리,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우수한 회계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기업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감사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유지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진의

3) Barth, M. E., and K. Schipper,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Volume 23, Issue 2, 2008, pp. 173~190.



책임을 강화하여 경영진을 주축으로 한 일관적인 통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정권이 바뀔 때 따라 대폭 교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회계정보와 관련한 통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의 진실한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효과적인 공시체계가 필요하다. 첫

째, 외부 감사인이 투입한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를 공시하게 하여 감사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⁴⁾ 필자가 2022년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감사 보수를 공시한 기관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감사 시간의 경우 감사보고서 첨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8개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적어서 감사위험이 낮을 수는 있으나, 여러 규정이 재무제표 수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유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적정한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가 투입되어야 진실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데 도움 줄 수 있다. 둘째, 알리오(ALIO)에 공시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며, 쉽게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난 과거 정보는 입수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시스템이 개시된 때부터 현재까지의 공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공시기한의 연장은 회계정보의 검증 가능성을 높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이 달라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특정 기관의 시계열적 비교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은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을 주며, 한국가스공사 사례와 같이 개인의 삶과 너무나 가깝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가지는 관심이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작이 아닐까 한다.○

4) 회계감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부 감사인이 대형 회계법인(Big)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Non-Big)에 비해 감사 품질이 더 우수함을 보고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동안 우리나라 36개 공기업(2022년 기준)의 외부 감사인이 Big인 경우는 80개 기업-연(약 56%), Non-Big인 경우는 64개 기업-연(약 44%)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 경우 외부 감사인이 Big인 공기업 수는 각각 23개, 18개로 나타나 Big의 비율이 감소했다. 한편, 4개년 동안 36개 공기업의 외부 감사인이 대부분 교체되었는데 Non-Big에서 Big으로 교체한 기업은 1개임에 반해, Big에서 Non-Big으로 교체한 기업은 8개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외부 감사인으로 Non-Big을 선호한다 해석된다.

회계법인 교체 유형	해당 기업 수
Big → Big	13
Big → Non-Big	8
Non-Big → Big	1
Non-Big → Non-Big	11
교체 없음	3(이 기업들은 감사인이 Big 회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세계 3위

우리나라가 2022년도 유엔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2)에서 193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¹⁾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²⁾)’를 평가³⁾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 행정기관 등 상호 행정 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⁴⁾ 이러한 전자정부 실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 정보공개권 보장의 기본적 구조 구축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전자정부 발전도는 우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우리나라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가 보장하는 내용 중 하나다. 알 권리는 우리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또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기본권이다. 그리고 그 의의나 성격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받을 자유인 자유권적 성격과 의사의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⁵⁾ 알 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도로 정비된 것은 20세기 중반,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

1) 행정안전부, 「국제연합(UN), 2022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보도자료, 2022. 9. 29.

2)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3) 평가기준은 △온라인 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의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1점 만점)에서 0.9529점을 기록해 덴마크(0.9717점), 핀란드(0.9533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4)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

5) 김배원,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헌법논총』, 27집, 2016, p. 187.

면, 일방적인 정보수령자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공리적 가치나 개인적 가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國政)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정보공개로 통해 획득한 정보는 국민 의사 형성의 기초 자료가 되고, 국민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해 민주적 과정에서 건설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견제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정보공개법」의 연혁

근대적인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다수의 국가가 국민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의 한 조례였다. 1991년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대법원의 합법 판단⁶⁾에 이르기까지 소송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을 바꾼 지방자치로 평가된다.⁷⁾ 뒤이어 국회가 1996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됐다. 현재 178개의 지자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시행·운영 중이고, 중앙 행정부처도 각각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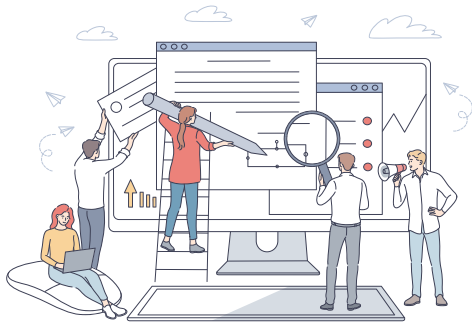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변천 과정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⁸⁾ 1996년 제정 이후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7) 『경향신문』, 「조례를 찾아서 ① 지역 넘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2019. 5. 1.,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905012152005#c2b>

8) 「정보공개법」 제1조



중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제도’ 도입,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심의 절차 강화, 정보공개 결정기간 단축(15일 → 10일) 등의 개정을 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2013년에는 공개 대상 결재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원문정보 공개’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구축·추진했다.

2016년에는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도록 했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개정을 했다. 2017년에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개선했다. 2018년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각부 장관 등 중앙 행정기관장 28명의 일정을 통합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청장 및 광역 자치단체장 34명까지 통합 공개 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공개 범위도 과거 일정(1개월 이상)과 미래 일정(1주일 이상)까지 공개하도록 확대했다. 2020년에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대상 기관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면서 제도 디자인이나 운영 내용을 개선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전반을 시민이 참여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580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국민이 참여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정보 비공개 사유와 개선점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정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법이 정한 경우⁹⁾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어 공개하지 않을 수

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정보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국가기관에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의 자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의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공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와 같은 공공이익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와 정보의 부분적인 봉쇄를 불가피하게 하는 공공이익 사이에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¹⁰⁾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중단 없이 시대를 반영해 검토돼야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

한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¹¹⁾ 대상 기관은 크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수치로 본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5%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¹³⁾ 2021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164만 2,959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89만 1,831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78%(69만 554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7%(15만 4,261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건은 5%(4만 7,016건)이다. 기관별 정보공개율을 살펴보면 중앙 행정기관 93%(2020년 92%), 지방자치단체 96%(2021년 96%), 교육청 92%(2020년 94%), 공공기관 94%(2020년 93%)로, 대부분의 기관이 높은 공개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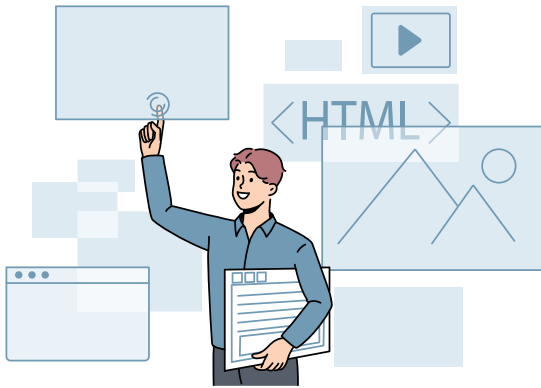
2021년 전체 청구 건의 99.5%가 법령상의 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대부분의 정보공개 처리가 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공개 방법으로는 주로 전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p. 602.

1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12)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13) 정보공개율: (2016년) 96% → (2017년) 96% → (2018년) 95% → (2019년) 95% → (2020년) 95% → (2021년) 95%



자파일,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이 이용되는데, 2021년에는 전자파일(78%), 사본·출력물(20%), 열람·시청(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교부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부가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4만 7,016건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2021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31%),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9%)인 경우, 재판 관련 정보(16%) 순이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바라며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지와 실행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내용을 통해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적인 운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보 비공개 사례들의 개선적 운영이 필요하다. 비공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이나 기관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문제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공표된 정보의 질적 제고 문제도 더 다듬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공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 중 일부는 실제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오·남용 행태로 인해 선량한 민원인의 알 권리가 제약받거나, 고질 민원·반복 민원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질 민원·반복 민원 등에 대한 자체 종결권 부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방안, 일시적 정보공개청구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성 강화, 그리고 정보공개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여야 한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세계는 정보의 시대로 들어서 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한 국가와 국민이다. 『직지심체요절』이나 조선시대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 등 우리 선조의 문화유산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자정부의 선도적 발전과 그 중요 부분으로서의 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 발전을 우리가 실현해 낼 수 있음을 믿어 본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이경영 최근 들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사업의 내용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주무부처 등 감독기관이나 기관장이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내부통제제도의 개념과 목적,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배근호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해온 규제와 감독 등의 ‘외부통제’를 기업이 스스로 내부화한 것을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부통제를 하는 목적은 이러한 내부통제를 통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재무 현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직적·체계적 관리방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상 과실(過失)이나 비위(非違)를 발견하고 방지함으로써 기업이 정하는 회계규칙·절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모든 절차를 내부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기 내부통제제도는 임직원의 부정과 행위상 오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자

2023년 2월 27일(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Webex)

사회

이경영

토론자

배근호, 정영기, 위극, 장세홍

정리

유승현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관련하여 내부감사위험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감사 업무를 통하여 적발되지 않을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위험은 개념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내부통제 절차의 설계 자체가 미흡하거나 설계된 대로 통제 절차가 발휘되지 않아 업무에 내재한 고유 위험이 부정 또는 오류로 나타나더라도 감사 업무를 통해 적발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업무를 통해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내부 공모 등에 의한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고유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용을 적절히 수행하며, 청렴교육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경영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대표적인 내부통제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달리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배근호 공공기관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과 교차감사가 증가하면서 유사한 제도들을 공유하는 등 시스템적인 성과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감사 시스템과 기관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시키고, 이를 통해 상시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 사전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률이 줄어들고, 다양한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제도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관리체계의 경우,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감사활동 성과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 감사실의 3단계로 구성된 내부통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로 정례화된 정기점검과 소통을 확대하고, 전사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영기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는 위임전결 규칙과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토대로 기관 공통 업무, 경영지원 부문에 해당하는 기관 운영, 예산, 인사, 총무, 재무관리, 사업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기획, 평가·관리, 사후관리, 성과 확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감사위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위험(inherent risk)은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특정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이 단독 또는 다른 계정잔액, 거래유형의 왜곡 표시와 합쳐서 왜곡 표시될 위험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업무 분장 및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는 업무에 내재된 부정과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 담당자의 사익 추구에 따른 부정위험요소, 관리자의 정직·성실성과 경험·지식, 업무의 복잡성과 민원 발생 가능성, 계속감사 실시의 여부 등이 있으나,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통제위험(control risk)은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통제장치에 의하여 방지하거나 적시에 적발·수정하지 못할 위험을 말하며, 통제위험의 발생 여부와 크기는 내부통제 절차의 설계 수준과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통제 절차는 업무에 내재된 부정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통제 수단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내부감사위험을 구조화하여 '고유위험 × 통제위험'으로 설정하고, 고유위험이 낮거나 통제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부서 및 직무 분장에서 부정과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내부감사위험 평가단계에서는 '저위험군'으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모두 높은 수준(H-H)인 경우, 적절한 감사 절차와 감사 자원의 투입이 수반되지 않을 때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경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운법」의 법령과 조항을 따르고 있으나,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장과 주요 책임자의 인식 수준, 리더십에 따라 기관 간에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현황(규정, 조직 및 인력구성, 활동)과 문제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극 저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기본적으로 기관 목표 달성을 위한 '3단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차 방어선은 현업부서(예하 사업소 272개)가 주관하는 각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이며, 2차 방어선은 정책 수립,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업무 분야별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부서(본사 주관부서 36개)가 담당합니다. 감사실은 최종 단계인 3차 방어선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링, 경영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 측면에서 내부통제는 회계통제와 운영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계통제는 본사 재무처 산하에 전담조직을 두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통제는 윤리준법, ESG 경영, 탄소중립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본사 해당 주관부서에서 내부통제 활동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 분야가 다양하여 기관 차원의 통합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경영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



배근호
동덕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세홍
기술보증기금
감사



위국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장세홍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법적 구속 없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① 위험 식별·대응(본부, 영업점) → ② 준법감시·위험 관리·내부통제 등 → ③ 내부통제 종합점검(감사실) 단계로 구성된 3차 방어체계 구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대내외 요구와 관심 증가로 2022년 12월, 내부통제 근거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2023년 1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총괄 전담부서 지정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을 개편하여 내부통제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선은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이 미흡, 2선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행 시 유기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기 내부통제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관장은 내부통제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장의 성과평가지표, 경영평가에 있어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영 공공기관은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투자·지원되는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와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기관 운영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와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감사제도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감사의 선입 절차와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결여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지 토론자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배근호 공공기관들은 감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직무 역량평가 진단모델을 개발하여 감사인 개인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취약역량 보완체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제내부감사 직무수행기준(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IPPF)에 기반한 감사의 독립성 분야 진단체계를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의 독립성 지수를 개발·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더욱 강화된 윤리성과 독립성을 체화시키기 위한 직급별·업무별 맞춤형 청렴·윤리교육과 교육에 대한 학습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확대는 기관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감사 업무 전반

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주기적으로 각 신고제도의 인지도, 신뢰도를 조사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영기 기관의 위임전결 규칙과 직제규정 시행규칙상에 열거된 업무 분장, 기능별·부서별로 유사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해당 기관의 내부통제제도나 절차에서도 발생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봄으로써, 미흡하거나 부족한 통제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관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극 회계통제가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수립하고 배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공공기관은 업무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어 명확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경영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저희 한전은 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업무별로 추진 중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사 통합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실에서도 감사인력의 내부통제평가감사사 자격 취득 등 내부통제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비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장세홍 현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감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승진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필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역이 승진에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기관의 대외평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규정 등 인프라는 대체로 잘 구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를 위한 기관의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장, 조직원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때, 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대내외 요구사항 증가로 인해 연수에 따른 타 감사역의 업무량 가중으로 감사역들이 연수를 회피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활동 심사의 ‘감사활동체계 인프라 개선 지원’ 지표의 자체 감사기구 현원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외부 전문연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한 장에 쏙!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올해부터 대상 확대!
실수로 잘못 보낸 돈, 꼭 돌려받아요!

신청 대상은?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이렇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문의 ☎1588-0037

[유의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앗!
잘못 보냈다!

모바일 이체완료	
출금계좌	123-456
입금계좌	234-567
이체금액	95,000원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이슈가 되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한국형 RE100 제도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활성화 노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OECD 공기업 통합연차보고 체계의 정의와 유형, 국가별 도입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항공산업 시장의 국가별 규모를 비교하면서, 경영효율화에 성공한 우수 해외사례를 통해 엔데믹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플랫폼 활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령·장애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노후가옥 개선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한국의 RE100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통합연차보고 체계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엔데믹 시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항공산업

혁신이야기
한국남동발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책동향 소식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9일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도입되어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편람 마련과 대상 기관 선정,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심사단 구성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사계획을 보고했으며, 서면 심사, 현장 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2023년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심사계획 보고



서면 심사



현장 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최종 등급 확정·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한 총 347개 기관이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 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지정됐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원의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라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정원 50명 → 300명 이상 등)을 최초로 적용하여,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



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됩니다. 다만,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정원, 총인건비, 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투명성을 담보합니다. 이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 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며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 및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인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청년인턴 분야 수상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상대 차관은 청년인턴들이 단순·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 규모 및 채용 계획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은 총 2.1만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60%인 1.2만명 이상을 상반기 중 채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장기인턴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공공기관이 6개월 미만의 청년인턴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개선입니다. 청년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앞으로 청년인턴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해서 협업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공공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새로운 공시환경에 맞춰 ESG 운영 관련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대분류 체계로 전환(기존 5개 대항목 → 4개 대분류)하고, 중분류를 신설(15개)해 일반국민이 좀 더 쉽게 공시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둘째, ESG 공시기준 도입 등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여 환경(E) 공시항목을 보강하고, 사회(S) 및 지배구조(G) 항목 등(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ESG 운영위원회 등)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경영평가 공시 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제 반영 등을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등의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그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제도 운영상 모호한 점검기준(공시오류 중 중과실 판단기준 및 우수공공기관·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 등)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은 2023년 1분기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기(4월 말)에 맞춰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고, 성과급 비중 및 차등 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직무급, 성과급의 배점을 확대합니다. 2023년 경영실적 평가 시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와 함께 성과급 비중과 차등액을 확대한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지급대상을 신규 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타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2023년 실적 점검부터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제고합니다.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설명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 공감대 형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한국의 RE100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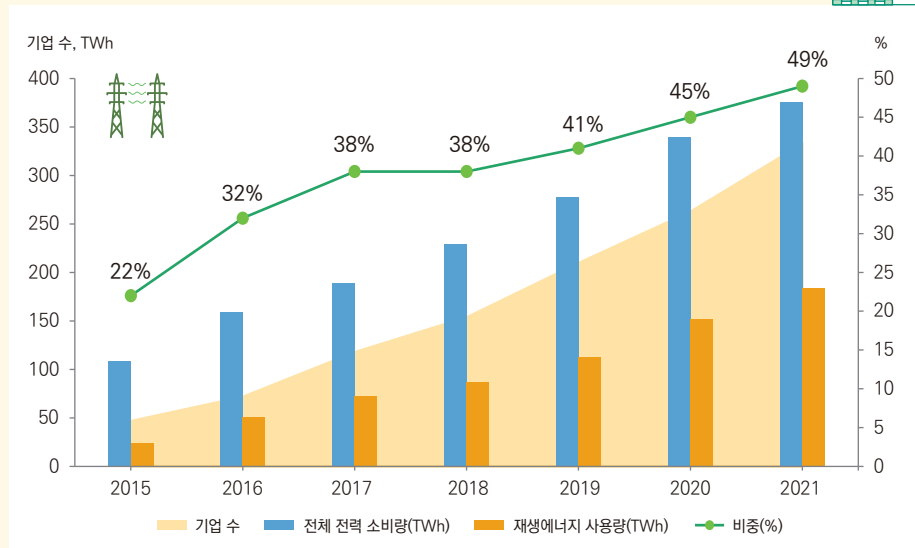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연구위원

탄소중립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전 지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국가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신(新)경제 질서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제 활동이 점차 강조되는 중이다.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제정하고 기업의 투자 및 자금 유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환경적인 측면의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참여를 통해 ESG 기업경영에 활용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글로벌 RE100 참여기업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추세



자료: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2"(2023)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14년 뉴욕 기후주간(Climax Week NYC)에서 시작한 RE100은 신뢰받는 브랜드 인지도, 일정 수준의 전력 사용량(연 100GW(기가와트) 이상) 등 RE100 참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RE100을 선언한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과 명확한 전략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제3의 단체를 통해 이행 실적을 입증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에 따른다.

2014년 13개 기업에서 출범한 RE100 이니셔티브는 현재 제조, 서비스, 음식료품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399개 기업(2023년 2월 기준)이 참여 중이며, 회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2”(2023)에 따르면, 334개 회원 기업의 2021년 총 전력 소비량은 376TWh(테라와트시)로, 이 중

49%(184TWh)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다. 이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SK그룹 6개 계열사의 참여를 시작으로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현재 27개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참여 중이다.

한국형 RE100(K-RE100) 제도 시행 및 성과

한국형 RE100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RE100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를 마련해 각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K-RE100은 글로벌 RE100과 이행 수단은 동일하지만, 이행의 엄격함 등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 제도 시행 후 K-RE100 참여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월 기준 246개 기업·공공기관·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PPA(전력 구매 계약/제3자 또는 직접), 지분참여, 자체 건설 등 크게 다섯

표 1 글로벌 RE100 vs. K-RE100



구분	글로벌 RE100	K-RE100
목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 달성	
중간 이행 목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중간 목표 있음(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보고	중간 이행 목표에 대한 세부 사항 없음, 자발적 설정
참여 대상	영향력 있는 기업, 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산업용·일반용 전기 소비자, 선언 별도 필요 없음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행 수단	인증서 구매, PPA, 자가발전, 지분 투자, green tariff	녹색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PPA(직접, 제3자), 지분 투자, 자체 건설
비고	강제사항 X, 기존 가입 기업들의 멤버십 기준 상향	강제사항 X

자료: 저자 작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녹색프리미엄은 입찰방식으로 거래되는데 하한가는 10원/kWh(킬로와트시)이지만 입찰 물량이 적어 2022년 기준 10.9원/kWh에 가격이 형성됐다. 인증서(REC) 구매의 경우 녹색프리미엄 대비 약 3~4배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지만, 기업에 배출권 편익이 제공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REC 가격보다 낮아서 인증서 구매의 순비용은 결국 녹색프리미엄보다 높다.

제3자 PPA, 직접 PPA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에 더해 한전에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조달비용이 발생하며, 자체 건설의 경우 PPA 대비 낮은 비용으로 알려졌지만 자체 건설을 위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달방식 간 비용 격차로 인해 2022년 5월 기준 지금까지의 한국형 RE100은 대부분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과 인증서 구매에 편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2022년 말 기준으로 직접 PPA는 1건, 제3자 PPA는 3건이 추가로 계약됐지만, RE100을 이행하는 기업으로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PPA나 자

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아직 부담스러운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K-RE100 이행 실적이 보여주듯, PPA와 자체 건설은 현시점에서 기업에게 고비용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상승 중인 전기요금을 회피할 수 있고 동시에 배출권 편익을 누릴 수 있기에 조달방안 간 비용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지속적 하락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PPA와 자체 건설의 경제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형 RE100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K-RE100을 시행하는 국내는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면에서 고도화된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방안 간 비용 격차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일부 이행 수단에 편중돼 있어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추가성(additionality, 조달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은 PPA 제도의 활용 제고,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표 2 K-RE100 이행 수단별 특징과 비용

구분	비용	편익	특징
녹색프리미엄	입찰제(하한가 10원/kWh)	없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증을 위한 비용만 발생,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X
인증서 구매	REC 구매비용(약 30~50원/kWh)	배출권	한국에너지공단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제3자 PPA	제3자 PPA 조달비용	전기요금, 배출권	계약전력 1MW 초과 전기사용자(계약물량) 발전사업자 발전량 전량
직접 PPA	직접 PPA 조달비용	전기요금, 배출권	300kW 이상 일반/산업 전기 사용자(계약물량) 전기사용자 실시간 사용량 한도
자체 건설	균등화 발전비용(LCOE) 수준(약 120원/kWh)	전기요금, 배출권	자체 건설은 기존 보유부지 사용 여부에 따라 이행 비용 상이

주: PPA의 조달비용은 태양광 장기고정계약 낙찰가격(2022년 상반기 기준 155~159원/kWh)을 참고.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조달비용 차이는 부과금 중 복지특례할인에 따라 달라짐

자료: 저자 작성





표 3 K-RE100 이행 실적(2022년 5월 기준)

이행 수단	참여기업 수			합계	사용량(GWh)			이행비용
	대기업	중견-중소	공공기관/기타		2021년	2022년	합계	
녹색프리미엄	38	28	19	85	1,440	4,670	6,110	10원/kWh
인증서 구매	3	11	11	23	5	5	10	21.4원/kWh
제3자 PPA	-	1	-	1	-	-	-	-
직접 PPA	-	1	-	1	-	-	-	-
자체 건설	3	3	5	11	1	4	5	-
합계	41	43	31	115 ¹⁾	1,446	4,679	6,125	

주: 1) 이행 수단 중복 참여기업을 제외한 합계를 의미함
 자료: 『전기저널』, 「직접구매제도(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22. 8. 4.,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653>

및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하락은 기술 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성이 높은 PPA나 자체 건설과 같은 이행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사례처럼 기업의 직접 발전, 지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조달제도에 더하여 onsite PPA(수요지 내 부지를 PPA 사업자에 임대 후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 계약), green tariff(전기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중개) 등 조달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이 각자 여건에 맞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매제도를 통해 적절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 필요하다.
 최근 한전은 직접 PPA 고객 대상 기본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약 1.5배에 해당하는 전용 요금제를 신설했다. PPA를 체결한 기업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공급을 위한 설비유지비가 새로운 요금제에 반영됐다. 그러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전력 사용량 전체에 전용 요금제가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파악된다. 이는 기업의 PPA 활용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신설된 요금의 적용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OECD 공기업 통합연차보고 체계



* 본 원고는 OECD가 2022년 발간한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Good Practice Guide for Annual Aggregate Reporting」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번역,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 시 아래 원문 링크를 참고하기 바람
www.oecd.org/corporate/monitoring-performance-state-owned-enterprises.htm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공기업 가이드라인’) 6장 C조는 “소유권 주체는 공기업에 대한 일관된 보고체계 및 공기업 통합연차보고서를 개발해야 하며, 일반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웹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공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또한 2005년부터 통합보고서에 준하는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¹⁾ 『공공경제』 Vol. 13에서는 2022년 OECD 조사를 바탕으로 공기업 통합보고체계의 도입 현황과 정의, 유형,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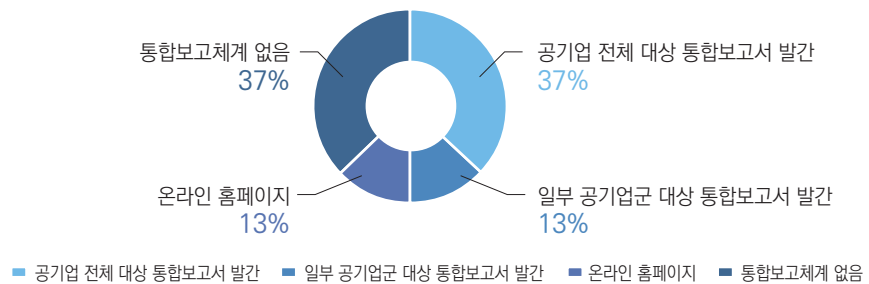
1) OECD는 한국의 알리오 시스템이 OECD가 권고하는 통합연차보고서와 기능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한다.

공기업 통합보고체계 도입 현황

‘공기업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2005년 이후부터 많은 국가에서 통합보고체계를 도입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① 공기업 소유권 기능의 중앙집중화 및 조정, ② 소유권 기관의 전문성 강화, ③ 공기업 부문의 투명성과 경쟁중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④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추세 때문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을 중앙으로 집중하거나 조정기관을 설립한 국가들이 많이 증가했고, 이와 같은 소유권의 집중은 전문성 강화, 법규 개선 등 다른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 집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OECD 조사 대상국 중 2/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매년 전체 공기업의 성과를 통합하여 공시한다. 54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37%가 전체 공기업에 대상으로 통합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에 대상으로 통합보고를 시행하는 국가는 13%,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국가는 13%, 통합보고체계가 없는 국가는 37%로 조사됐다(〔그림 1〕 참조).

〔그림 1〕 54개국의 통합연차보고체계 현황



자료: OECD,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양질의 통합보고체계는 ① 공기업 공시/투명성 관련 법률 및 규제요건 강화, ②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보고 기준의 광범위한 활용, 그리고 ③ 공기업에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포함한 엄격한 통제 환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 등으로 가능해진다.

공기업 공시기준은 보통 회사법, 기업지배구조 강령,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공기업 설립법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공기업은 동종 업계의 민간기업과 동일한 보고/공시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IFRS나 GAAP²⁾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이나 그에 준하는 국내 회계기준을

2)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설정한 기준이며, GAAP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설정한 기준이다. IFRS가 국제적으로 더 널리 사용되는 반면, GAAP는 미국과 기타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회계/보고 기준이다.

사용한다. 대부분의 상장 공기업, 대형 공기업, 금융기관은 IFRS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규모 비금융 공기업은 IFRS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U 회원국 등은 감사인 순환 의무화, 외부 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제공 제한/금지,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 모니터링 강화 등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통합보고체계의 정의, 유형 및 중요성

통합연차보고는 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매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고 대상 연도의 전체 공기업 성과를 과거 실적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기업 부문의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요소를 갖출 수 있다. 통합연차보고는 단순히 규정 준수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재무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주요 사건, 전후 상황과 비재무적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공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주요 쟁점과 시계열의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에 간결하고 비교 가능하며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통합연차보고는 ① 공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가 포함된 서술형 보고서, ② 공기업의 재무/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③ 의회 제출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통합연차보고서 발간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으나, 투명성 제고 및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소유권 보장의 척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의 범위는 종종 소유권 기능의 특징과 전문성 수준, 전체 공기업 규모와 가용한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 조정기관 또는 소유권 담당 부처가 있을 때 소유권이 분산되었을 때보다 통합보고의 정보 수집 차원에서 유리하다.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소유권 조정기관은 통합보고체계를 갖추기에 유리한 법적 환경, 전문성, 정보 수집/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공기업 예산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공기업 재무정보를 보유 중인 재무부가 통합보고를 담당한다. 이탈리아는 국가감사원이 전체 공기업 관리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한다. 그리스는 국유재산관리기구(HCAP)와 재무부가 각각의 산하 공기업에 대한 통합보고를 시행한다(HCAP: 통합보고서 발간, 재무부: 의회 제출 보고서).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접근성 높은 정부 포털을 통한 공기업 정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홈페이지의 장점은 정보의 재편성과 정기적인 업데이트, 정보의 적시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한국, 호주, 우크라이나는 이용자가 공기업 정보를 통합 또는 세분화된 방식으로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식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통합보고체계 현황

보고 유형	국가	소유권 모델	운영 주체
통합보고 (전체/일부)	브라질	이중트랙형/복수소유권형	경제부, SEST
	칠레	중앙집중형(산하기관 중 일부)	공기업부(SEP)
	핀란드	중앙집중형	총리부 산하 공기업관리실
	프랑스	중앙집중형(산하기관 중 일부)	공기업관리청(APE)
	독일	분산형	재무부
	아일랜드	중앙집중형(산하기관 중 일부)	신경제 및 회복실(NewERA)
	이스라엘	중앙집중형	재정부 내 공기업국(GCA)
	일본	분산형	재무부
	네덜란드	중앙집중형(산하기관 중 일부)	재무부
	노르웨이	중앙집중형(예외 존재)	통상산업어업부
	스웨덴	중앙집중형	기업혁신부
	스위스	이중트랙형/복수소유권형	연방재정국실
온라인 포털 홈페이지	호주	복수소유권형	재정부
	한국	중앙집중형	기획재정부
	우크라이나	분산형	경제부
의회 제출용 보고서	아르헨티나	분산형	대통령실, 재무부
	그리스	중앙집중형(산하기관 중 일부)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기구(HCAP)
	이탈리아	중앙집중형	국가감사원, 재정경제부
	슬로바키아	분산형	재정부

자료: OECD, 「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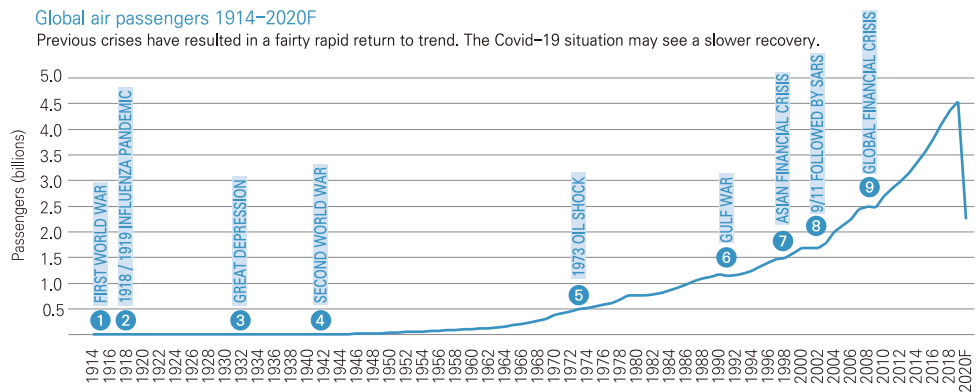
통합연차보고는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소유주,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와 경쟁중립성에 도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산하 공기업 성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이는 보다 전문적인 소유권 정책으로 연결된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은 소유권 기관의 목표 달성을 보다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측정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정보 수집은 더욱 견고한 경영성과 관리 시스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과 투명성/공시는 개선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중에 공개되는 통합보고서의 분석과 결론 부분은 공기업이 국민 최선의 이익과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 통합연차보고는 또한 공기업의 책무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효율성 및 성과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투명성 수준에 따라 대기업의 순위를 매기는 ‘투명성 벤치마크’에 공기업 포함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공기업 지배구조 지수’를 통해 우수한 지배구조 사례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공기업을 선정한다.○

엔데믹 시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항공산업

유례없는 항공산업 위기, 다시 열린 하늘길

항공산업은 지난 100년간 세계대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발하며 몇 차례 일시적 부침을 겪었으나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 세계가 국경을 닫으며 항공 수요는 유례없이 급감했고, 이 위기는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그림 1] 글로벌 항공 수요 추이(2014~2020년)



자료: Air Transport Action Group(ATAG),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2020, p. 7.

다행히 전 세계 백신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국가별 여행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글로벌 항공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며, 상대적으로 일찍 국경을 연 미주와 유럽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지나해 하계 수요회복기에 일부 유럽 공항(히스로, 스키폴 등)에서는 수백 개의 수하물 분실, 장시간 체크인 대기와 항공기 결항 등의 대란이 발생했다. 2019년 국제여객 수 전 세계 2, 3위를 차지한 런던 히스로공항과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은 이로 인해 하루 이용객을 각각 10만명과 7만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강행했다. 이는 팬데믹 장기화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공항운영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 인력 및 조직을 축소 운영해오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신가운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조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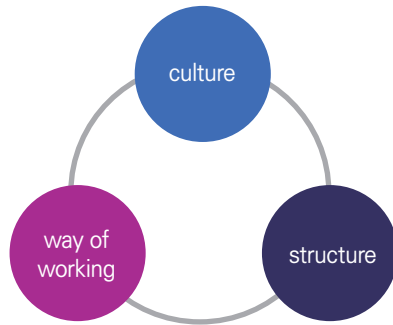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총여객 추이

(단위: 만명)

구분	공항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객 수	여객 수	2019년 대비	여객 수	2019년 대비	여객 수	2019년 대비
유럽	히스로	8,089	2,211	△73%	1,940	△76%	6,161	△24%
	프랑크푸르트	7,056	1,877	△73%	2,481	△65%	4,892	△31%
	샤를 드골	7,617	2,226	△71%	2,620	△66%	5,748	△25%
	스키폴	7,171	2,089	△71%	2,549	△64%	5,247	△27%
미주	로스앤젤레스	8,811	2,878	△67%	4,801	△46%	6,592	△25%
	애틀랜타	11,053	4,292	△61%	755	△93%	9,370	△15%
아시아	싱가포르 창이	6,828	1,176	△83%	305	△96%	3,220	△53%
	홍콩	7,144	882	△88%	135	△98%	564	△92%
	인천	7,120	1,206	△83%	323	△95%	1,792	△75%

자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ACI) 항공통계

〔그림 2〕 스키폴공항 경영효율화 프로젝트(Project Re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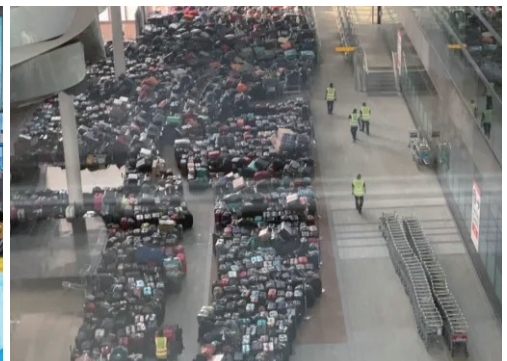


- (조직) 조직구조 단순화 및 효율성 제고, 미래 사업 강화
 - (인력) 정규직 약 2,500명 중 약 330개 직무 축소로 전사적 인력 재구성 및 자회사·아웃소싱 인력 축소 병행
 - (재무)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 및 비용 지출 절감
- 팬데믹 기간 3대 축(문화·조직·일하는 방식) 혁신과제 이행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조직체계 운영

자료: 스키폴공항 발표자료



스키폴공항 체크인 장시간 대기 모습(2022년 9월)



히스로공항 수하물 분실·지연(2022년 6월)

인천공항은 지난 3년간 항공사, 상업시설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사 용료를 감면하며 고용 유지 등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단기적으로 공 항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수요회복 시기 공항운영 마비를 예방하고 더 큰 혼란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공항 경쟁력 유지에 기여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의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2월엔 하루 여객 14만명 (2019년 20만명)을 돌파했다.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 필요

통상 공항의 수익을 구분할 때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으로 나눈다. 항공수익은 공항 본원 시설 이용에 대해 항공사 및 여객이 지불하는 사용료(착륙료, 여객이용료 등)이며, 비항공 수익은 상업시설(면세점, F&B), 토지, 건물(사무실) 등 부대시설 임대수익이다.

인천공항은 그간 저렴한 공항사용료를 유지하는 대신, 늘어난 여객과 취항노선을 기반으 로 공항 내 상업시설의 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비항공수익을 확보해왔다. 지속적인 여객성 장세에 기반한 탄탄한 항공수익과 글로벌 1위 면세산업에 힘입은 높은 비항공수익(이 중 75%는 상업수익)으로 인천공항은 2019년 매출액 2.8조원, 당기순이익 8,600억원을 기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산업 리스크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 으며, 특정 부문에 치우친 기존의 수익구조로는 향후 글로벌 위기 재발 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경영체질 혁신이 필요하며, 절대적 수익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를 보면, 2019년 항 공/비항공수익 비중이 비교적 균등했던 샤를 드골공항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다른 공항 들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율이 적었다. 이는 부동산, 해외사업 등 사 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수요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공항 항공/비항공수익 비중 및 매출액 추이

구분	공항명	매출액 비중(2019년)		매출액(억원) 및 2019년 대비 증감률		
		항공수익	비항공수익	2019년	2020년	2021년
유럽	히스로	59.6%	40.4%	45,676	17,778(△61%)	19,108(△58%)
	프랑크푸르트	46.8%	53.2%	48,354	22,572(△53%)	28,990(△40%)
	샤를 드골	52.0%	48.0%	61,326	28,764(△53%)	37,567(△39%)
	스키폴	59.8%	40.2%	21,068	9,264(△56%)	11,042(△48%)
아시아	싱가포르 창이	39.2%	60.8%	26,878	5,960(△78%)	8,038(△70%)
	홍콩	38.6%	61.4%	25,871	9,031(△65%)	854(△97%)
	인천	33.7%	66.3%	28,265	11,574(△59%)	5,59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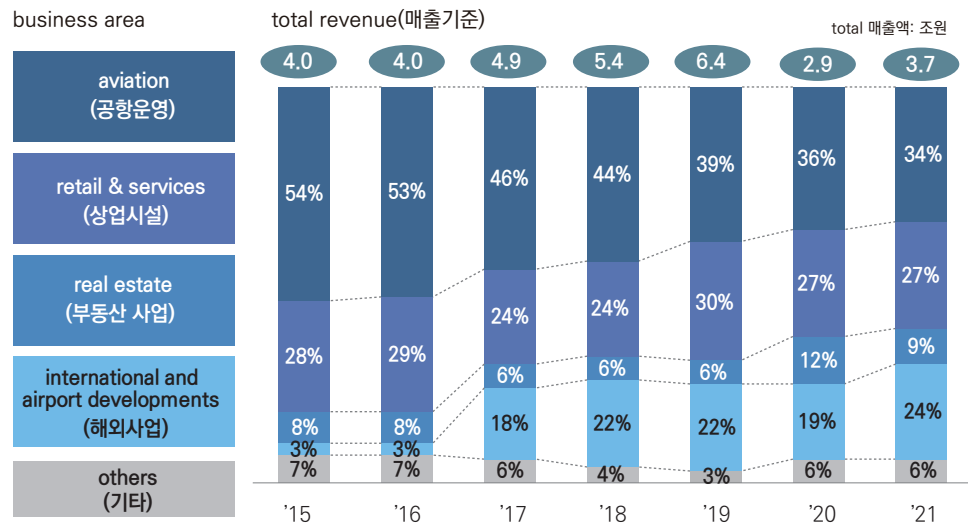
자료: 공항별 연차보고서

해외 공항들은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원가보전을 위한 공항사용료 인상을 통해 항공수익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비항공수익 다각화를 위해 기존 사업구조 재편과 신규 사업을 발굴 중이다. 특히 문화/산업 중심의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사업 확대 등 공항 본연의 기능을 넘어 연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 주요 공항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영향 최소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제수송 위주의 공항들은 경영성과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산한 샤를 드골공항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매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를 드골공항을 운영하는 Groupe ADP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공항 운영 분야 매출 의존이 2015년 54%에서 2021년 34%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사업을 통한 매출 점유는 2015년도 전체 매출의 3% 수준에서 2021년도 24%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3] Groupe ADP의 매출구조 추이



자료: Groupe ADP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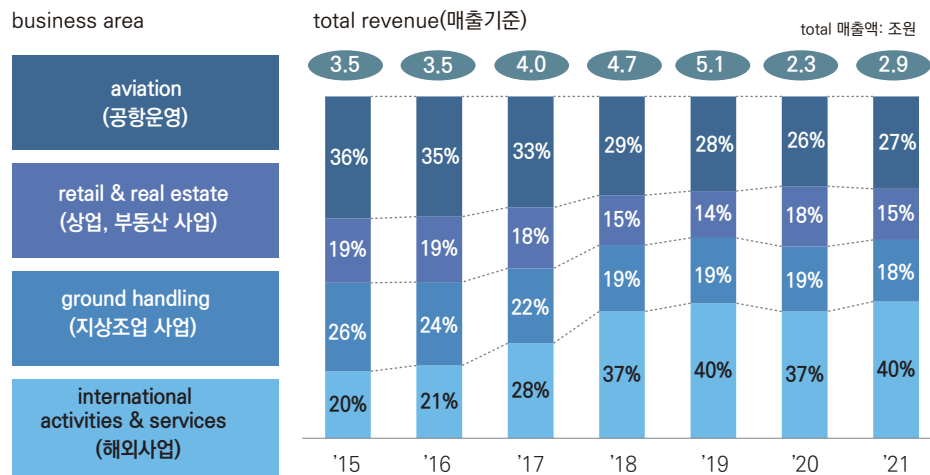
Groupe ADP는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16개국에서 약 22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으로 다각화하여 환경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비즈니스구조 변화를 지속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공항 리테일 사업 회사, 광고서비스 회사 등에 지분투자를 통해 유관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운영하는 프라포트(Fraport)의 경우 공항운영 매출은 2015년 36%에서 2021년 27%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Groupe ADP와 동일하게 해외 사업을 통한 매출은 2015년 15% 수준에서 2021년 40%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타 해외 공항과 다르게 지상조업(ground handling)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등 공항운영자가 직접 지상조업을 수행 중이다. 그 결과 항공사 대상 공항 운영과 직결된 서비스를 고품질, 풀 패키지로 한 번에 제공하여 타 유럽 공항 대비 협소한 부지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트래픽을 처리한다.

[그림 4] 프라포트 매출구조 추이



자료: 프라포트(Fraport) 연차보고서

또한 2021년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에 걸쳐 다양한 공항운영 사업, 미국 리테일 컨세션 관리, 물류센터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변화 영향 최소화 및 매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및 서비스 정착, 디지털전환 가속화, 초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항공산업 역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자 신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공항은 정부,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항공기와의 연결을 통한 접근교통 다각화 및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표 3〉 해외 주요 공항 UAM 추진 동향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싱가포르 창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현황	Groupe ADP- 에어버스(Airbus)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민항청-에어버스 UAM 상용화를 위한 MOU 체결	프랑크푸르트공항- 볼로콥터(Volocopter) 에어택시 서비스 필요 인프라/운영 개념 개발	네덜란드 항공(KLM), 관제청 등을 포함한 Dutch Drone Delta 설립 개발 진행
계획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중 공항-도심 연결 에어택시(air taxi) 서비스 제공	에어택시 서비스 상용화 추진	공항-도심 간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서비스 추진 예정	지상교통 연계, 인프라 입지 설계 등 UAM 적용방안 연구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각국 정부와 공항 간 협업을 통하여 기존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련 신기술을 개발·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신기술을 공항운영에 적극 활용하며 출입국 간소화 및 편의성 향상,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한 혁신을 전개 중이다.

〈표 4〉 해외 주요 공항 물류경쟁력 강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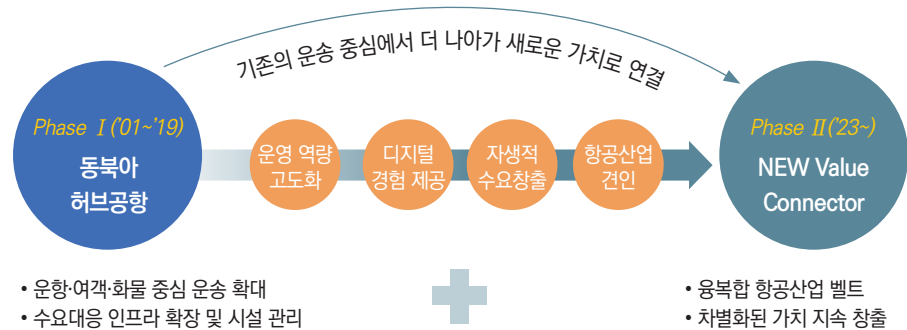
홍콩 (체콰콧)	싱가포르 창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미국 멩피스
· 선도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홍콩공항(HKIA)	· key 화물 유치	· 프라포트 화물(Fraport cargo) (재)구성 전략	· Europe's smartest cargo hub	· 멩피스공항 전략 내 화물 부문 전략
국제 간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전용 터미널(물류센터) 구축	저온 유통체계(콜드체인) -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Pharma), 쿨카고 터미널 구축 등	여객기 화물 수송(belly cargo) 집중 전략 - cargo city south 확장, 제3터미널 개항	디지털화-자동화 - Smart Cargo Mainport Program 등 추진	커뮤니케이션 강화 - 매월 파트너 미팅(고객 간담회) 개최
고부가가치 화물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Pharma), 신선화물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Fresh) 등 획득, 쿨카고(cool cargo) 터미널 구축 등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E-commerce) 터미널 구축, SingPost 협업 등	화물 커뮤니티 조성 - Air Cargo Community Frankfurt와 협력 등	화물 커뮤니티 조성 - Pharma Gateway Amsterdam(PGA), Holland Flower Alliance 등	화물 인프라 확장 - cargo east 시설 및 계류장(ramp) 공간 확장
환적 물량 증대 - 환적화물 전용 시설 구축	특송(express) - 광역(regional) 특송 허브 및 지역 본부(HQ) 유치	디지털화-자동화 - FAIR@Link 도입, 세관신고 디지털화	여객기·특화 화물 유치 - 의약품, 전자상거래, 꽃 등 주요 화물 유치	페덱스·유피에스 협력 강화 - 최대 이용자인 페덱스(FedEx)·유피에스(UPS)와 협력 강화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새로운 미래로의 발전 방향 재정립 필요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동북아 허브공항 달성을 목표로 항공 수송 네트워크 확대와 터미널·활주로 인프라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5위 국제여객, 세계 2위 국제 화물 수송 공항으로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제운송이 1/5로 축소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전통적인 공항을 답습하며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운송 서비스 제공’의 ‘동북아 허브공항’ 목표에서 신기술 도입,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차별화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New Value Connector’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 인천공항 포지셔닝 변화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에 인천공항은 ① 공항 역할 확대, ② 기술 선도, ③ 새로운 가치 창출, ④ 경영효율화의 4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 공항 사례처럼 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개발 사업 수주 추진 등 해외사업 확대, 화물기 개조 사업 및 정비시설 개발 본격 추진, 복합리조트 연내 운영 개시, 랜드마크 시설 민간사업자 유치 등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항운영에 도입하여 수요대응 공항에서 가치창조형 공항으로 진화 중이며,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표 5〉 인천공항 향후 성장 방향 및 주요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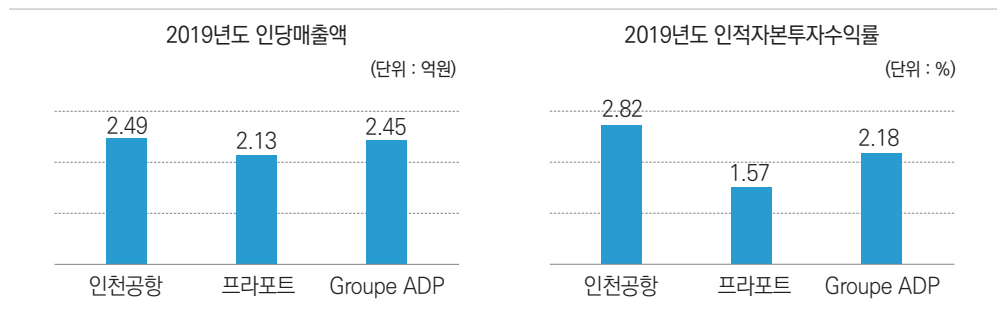
4대 방향	주요 추진 내용
공항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확대) 정부-민간과 협업을 통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개발 사업 수주 등 * 현재 인천공항이 전략적 자문 역할 수행 중 • (융복합 산업 벨트) 주변지역 내 화물기 개조 사업, 랜드마크 건설, 복합리조트 개장 등 • (인프라 강화) 항공 네트워크 강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
기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전환) 여권/탑승권/생체정보를 결합한 종이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차세대 출국 • (스마트패스) 본격 시행,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예측 기반 지능형 공항 운영 • (모빌리티) UAM 활성화를 위한 실증, 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 자율주행, 로봇 주차 등 교통시스템 혁신
새로운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신속 출국 절차, 출입국 과정 혁신, 환승 과정 개선, 오프에어포트 고도화 등 서비스 차별화로 공항 이상의 고객 경험 제공 • (문화예술) 수장고, 박물관, 신(新)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한 세계 최고 문화예술 공항 가치 극대화
경영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혁신) 정부 혁신정책 방향에 따른 불요불급 자산 매각, 조직 효율화 등 효율 극대화 및 생산성 혁신 • (재무건전성) 수익구조 개편, 사업다각화, 비용 절감,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러한 미래 방향의 적정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객 수와 같은 기존의 양적 지표가 아닌 글로벌 비교가 가능한 질적 경쟁력 측정지표 발굴 또한 중요하며, 우리 공항의 세계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 투입 대비 생산성(인당매출액, 인당처리여객 수 등)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항 대비 내실화 정도와 경영효율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그림 6] 해외 공항과의 생산성 비교 지표(예)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위상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도약은 공항뿐만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 및 유관산업의 위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플랫폼 활용한 발전량 예측으로 에너지 혁신 선도

추진 배경

»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급증, 정전 위기 수차례 발생

-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 친환경 정책으로 분산전원 신규 보급량 매년 급증
- 하지만 간헐성 · 변동성이 높아, 발전량 과부족으로 인한 정전 위기 빈번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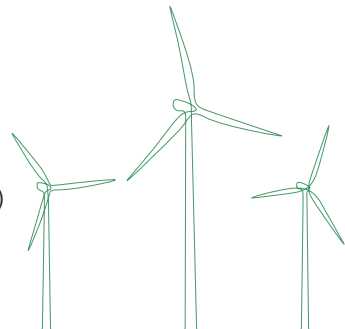
» (대안)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 위한 가상발전소 및 에너지 플랫폼으로 에너지 혁신 선도

- 목표(2034년까지): 가상발전소 3.5GW 모집, 온실가스 340만톤 감축, 중개수익 130억원 확보

» (내용) 가상발전소 기반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플랫폼 'FIND' 개발



- (STEP 1) 독자기술 기반 공기업 최초 가상발전소 구축 성공
 - (기술)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특허 출원(8건) 및 발전량 예측기술 개발(2019년) **공기업 최초**
 - (설비) 남동발전 VPP 플랫폼 비즈니스 센터 개소(2020년 12월) **발전사 최초**
- (STEP 2) 사내 · 외 신재생 자원 142.8MW 모집 완료(2021년 12월)
 - (사업자) 남동발전 가상발전소에 참여해 중개수익 추가 확보
 - (남동발전) 사내 신재생 관제센터 구축으로 자체 보유 자원 조달
- (STEP 1 + 2)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전력중개) 참여(2021년 5~10월)
 - 전력거래소 주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실증사업' 통과(2021년 5월)
 - 전력중개사업 참여(2021년 10월) 및 전력거래 정산수익 확보(2021년 12월)



🔍 추진 성과

» (중개기술) 발전량 예측 등 자체 개발 가상발전소 기술 확보(특허 8건) 공기업 최초

- 발전량 예측기술 개발 및 KOEN VPP센터를 구축해 시범사업 성공

» (중개자원) 사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집 노력으로(143MW) 최대용량 확보

- 자체(56MW)·위탁(65MW)·일반사업자(22MW)로 구성된 가상발전소 구축

» (중개 개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실증 통과 공기업 최초 및 중개 개시

- 최고수준 예측정확도(93%)로 중개정산금 12백만원 확보 및 참여자 배분

» (사업 확대) "FIND Your Energy"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FIND' 시작

- 전력중개 외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확대 운영



🔍 향후 계획

» (확대방안) '자원·기술·사업' 고도화로 디지털 플랫폼 내실화 집중

자원



속도감 있는 자원 모집으로 신재생 통합관제 시대 선도

- 단기 180MW(2022년) → 장기목표 3.5GW(2034년까지) 모집으로 석탄발전소 6개 대체
- 신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한국형 VPP 사업자' 선정 도전(2023년)

기술



예측정확도 고도화(93% → 95%)로 신재생에너지 대표 플랫폼 도약

사업



예측기술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사업 추진

고령·장애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노후가옥 개선 사업

추진 배경

» 국가유공자의 집안 내 거동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고령·장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합 만성질환과 부상으로 인해 인지 및 행동 제약이 존재하며, 낡고 오래된 가옥의 외부 화장실, 경사로, 문턱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 또한 고령에 따른 일상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립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증대

» 수요자 중심의

정주형(aging in place) 주거환경 조성 필요

- 대다수 국가유공자의 경우 노후 생활공간으로 '자신의 집에서 거주'를 선호, 또한 노후 조력자로 '가족의 도움'을 희망
- 국가유공자가 오랫동안 살던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시급

추진 내용

» 민-관-공 보유역량 협업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추진

지식 협업



①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하우 협업

-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팀: 고령 친화적 인지건강 디자인 도입 적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고령 안전을 위한 제품 안내 및 활용 방법 전수

기술 협업



② 공단이 부족한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점검, 노후화된 콘센트, 전등 무상 교체 등
- 코레일테크: 가옥 안전 점검 무상 지원, 파손 전기설비 수리 지원 등

상생 협업



③ 사회적·여성 및 벤처기업 기술 활용으로 상생문화 조성

- 사회적·여성·중소기업: 우수 시공업체 연계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고그린테크(벤처기업): IoT 응급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지원 설치



추진 성과

»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추진 및 표준매뉴얼 제작

거동 불편
해소



▶ 고령·장애 유공자 거동 불편 최소화 디자인 및 시공 반영

- 문턱 제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부착 등
- 2021년 주거환경 개선 572가구 중 357가구에 안전 설계 적용 시공

안전사고
방지



▶ 전문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한 가옥 안전사고 최소화

-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팀과의 사물 위치 기억, 색채 대비 등 인지건강 스티커 45종 적용 시공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인지력 향상에 도움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기술 인력 활용, 총 481가구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 무상 지원 및 노후화된 콘센트와 LED 전등 무상 교체 진행
- 코레일테크의 전문기술 인력 활용, 가옥 안전 점검 무상 지원, 대전·충남 지역 등 충청권 국가유공자 화재 취약 가구를 방문해 안전점검 및 파손된 전기설비 수리
- 고그린테크(벤처기업)와 IoT 응급안전 관리 시스템(동작감지, 화재감지 등) 개발, 주거 취약계층 80가구에 설치해 긴급상황 시 신속 대처 가능

상생문화
조성



▶ 지역별 35개 사회적·여성·중소기업 등 대상 공사 계약 실시

- 지역별 협력업체, 5개 우수 자활기업과 공사 계약 체결, 신속한 무하자 공사 시행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표준매뉴얼
제작



▶ 주거환경 개선 표준매뉴얼 자체 제작

-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자문을 기반으로 고령자,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표준매뉴얼' 제작
-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배포 및 공사 방법 교육으로 공사 품질 향상

향후 계획

» 고령·장애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서비스를 위한 협업 기관 발굴

- 국가유공자 개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환경 진단, 기술 자문, 봉사활동 등 전문기관의 협업 참여 확대

» 중앙정부, 전국 지자체 등 표준매뉴얼 배포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하우 확산

- 지역별 협력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배포에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배포해 협업 성과 확산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9년 강원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지역인재 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독자분들에게 유용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CEO인터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혁신도시 박람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잡(JOB)담

중소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2022~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2018~202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2014~2017 정부3.0추진위원회
기획총괄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중성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 출범해 36년 동안 한국의 정보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강국,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데이터 일등 국가 등의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성과들에 이어 앞으로 우리 원은 크게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우리 원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는 정부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지능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만큼 큰 사명감을 가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 조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능정보시대에 필요한 국가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계와 학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대 변화를 선도하려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즉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지능정보사회는 국가데이터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데이터를 생산·공유·활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지능서비스들이 먼저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전할 것입니다. 셋째, 신(新) 디지털 포용에 기반을 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선언에서 한국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수출 해외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전하겠습니다. 디지털 수출이 23% 급감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의 해외 수출 수요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디지털 분야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원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디지털 수출 수요를 창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첫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정부란 무엇이고, 기존의 전자정부와 어떤 점이 다르며 국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는 것인가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이번 호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맞게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만 했다면, 앞으로는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 칸막이에 막혀 있던 부처별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개방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 공유·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클라우드를 도입해 서비스의 최신성과 적시성을 개선해 비용은 낮추고 가치는 높이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정부 서비스와 융합해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민간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상황에 꼭 맞는 수혜성 서비스, 각종 고지 등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구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개방해 국민이 친숙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청약, 대출 등에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개인 전자지갑에 묶음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의 시스템 구축·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존재해 사업 기획부터 서비스 운영,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까지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필수 조건으로 이를 포괄하는 계획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 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을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산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NIA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원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축적된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 국가 전반에 지능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 데이터 구축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 이를 대신해서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91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품질 검증이 완료된 381종의 데이터를 ‘AI 허브(AI-Hub)’에서 개방해 총 22만 회 이상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활용된 데이터는 KT AI 스피커의 지역 방언 학습, 네이버 클로바노트(회의록) 서비스 고도화, 카카오 안면 인식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

온다’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처럼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학습모델을 구축할 때 데이터 세트(data set) 구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 기업들이 데이터 윤리 걱정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데이터 공유 유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공공, 민간이 함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 센터를 구축했으며, 현재 5개 플랫폼, 50개 센터를 추가 구축 중입니다.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한 데이터 전반의 그림을 재설계하고,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새로운 국가데이터 인프라 체계’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행정 및 정책 수립 부분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NIA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원은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공유 및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공유 의무 부과 및 개별 법령 제한사항 완화, 공동 활용 제외 시 데이터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하고,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공유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신청 시 데이터 분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시설 구축사업, 행정서비스 확대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신청 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 첨부을 의무화하는 증거 기반 예산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원활한 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 활용도 높은 데이터 분석모델을 발굴하고, 온라인 자동 분석모델을 제공하며 전 공무원 대상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 발전으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간 우리 원은 개인의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등)을 추진해

“Garbage in, garbage out.”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원도 디지털 권리장전 등 보다 혁신적인 범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개선 등으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말씀한 디지털 자유 시민을 통한 연대의 기본법으로 (가칭)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의 역할은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법으로서 디지털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NIA는 UN,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선도 기관으로, 한국의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NIA는 세계은행 디지털 정부 성숙도 평가 결과, 198개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달성하도록 지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 정부 등 한국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정책과 주요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은행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코리아 디지털데이 2023’에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인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인프라 정책을 소개하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서 기업 홍보·솔루션 확산·비즈니스 미팅 지원 등 직접적으로 수출에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가칭)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분야 수출을 상시 지원해 해외 공공사업 수주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규 수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NIA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 그 이상!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 거듭나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금융경제학 석사

주요 경력

2022~현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022 삼성SRA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2021~2022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2018~2021 금융결제원 감사
2014~2017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013~2014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12~2013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2011~2012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2009~2011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2007~2009 주영국대사관
재경공사참사관
1983 행정고시 합격(제27회)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는 기관이지요, 신용보증기금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공공경제』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용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6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본사는 대구 혁신도시에 있고, 9개 영업본부, 109개 영업점, 15개 재기지원단, 11개 채권관리단의 전국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복합위기 파고를 넘으며 신보의 금융 지원 규모는 2018년 말 81.4조원에서 2022년 말 118.9조원까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요 업무인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 ‘보증연계투자’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매출채권보험’(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 ‘문화산업 완성보증’(문화체육관광부), ‘녹색보증’(산업통상자원부), ‘녹색공정전환보증’(기획재정부)까지 신보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려는 다른 부처의 위탁사업 요청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신보는 경제위기 극복 DNA를 지닌 기관입니다. IMF 외환위기 시 생계형창업보증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은행자본확충 특별보증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피해대응 유동화보증,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적시에 지원하며, 위기 상황마다 묵묵히 마운드에 오르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1호인 저금리 대환보증과 채권시장안정 유동화보증까지 적극 수행하며, 3고(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보는 혁신금융 DNA를 가진 기관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견고한 스타트업 종합지원체계를 완성하고, 한국형페이덱스(Paydex)인 ‘상거래 신용지수’와 AI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를 개발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금융 대표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장으로서 느낀 소회와 함께 다양한 공직, 국제기구·민간 분야 경험이 신보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보 이사장인 저는 영세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복합위기 속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불안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번 호 CEO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신보 문을 다급히 두드리는 기업 통해 복합위기 속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불안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절감하고 있어



가능한 시간을 내어 영업조직을 방문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려 애씁니다.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에 실무자들의 고민이 더해진 현장 밀착형 제도가 빠르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재무부 사무관 시절부터 출연예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담당하며, 신보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근 3~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약 4조 6천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신보에 긴급 투입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신보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특별출연을 통해 협력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동참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주영국대사관 재경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를 거치며, 이미 일본이나 대만을 능가하는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리스크 관리 모델이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보 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회의(ACSIC)’에 참가한 19개 회원기관의 높은 관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활용,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신보형 신용보증제도를 개발도상국과 적극 공유해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신보의 데이터 플랫폼 BASA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신보는 기업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48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형 기업경영진단 툴 ‘BASA’를 오픈해, 민간, 학계, 유관 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컨설팅 솔루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빅데이터부에서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형 개발, 외부 데이터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선정을 계기로 향후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보는 디지털(D), 데이터(D), 플랫폼(P) 기반의 한 차원 높은 자체 금융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과 청렴도 1등급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바로 ‘청렴도 우수기관’ 아닐까요? 2022년 신보의 전 임직원은 청렴한 업무 수행과 부패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만큼 국민 여러분이 신보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취임할 때부터 강력한 청렴 의지와 윤리경영을 강조해왔으며,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 취약 분야 지속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과 협력, ▲민간 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직원들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충돌 예방시스템 구축, 윤리 KPI(핵심성과지표) 도입, 윤리경영 실행조직 ‘인권·윤리지킴이’ 확대 등 반부패 과제를 적극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보는 올해의 영예를 잊지 않고, 최상의 청렴 선도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신보의 확대된 미래상을 담은 뉴 비전체계를 발표하셨습니다. 신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구성원의 단합된 움직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기에 따라 수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관된 비전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신보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전임 이사장님의 방향성을 그대로 계승하되, 확대된 신보의 정책지원 역량을 활용해 혁신성장의 가치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비전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를 유지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기본 사업혁신 방향을 계승하는 한편,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을 덧붙여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업들이 급격한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건의 보증 지원 수준이 아닌, 현황 진단부터 금융컨설팅에 이르는 종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신보는 창업 초기부터 성숙기에 이르는 모든 고객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책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총망라해 최적의 기관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안내하는 원스톱(one-stop)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업지원의 모든 것, 저희 신보를 먼저 찾아오십시오.



이해충돌 예방시스템 구축, 윤리 KPI 도입, 영업본부별 윤리경영 실행조직 ‘인권·윤리지킴이’ 확대 등 반부패 과제 수행 결과, 청렴도 1등급과 대통령 기관 표창 영예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 과거의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 도약할 신보의 미래 기대



이사장님의 제1 경영철학은 무엇인가요?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자주 건네는 조언도 궁금합니다.

2,700여 명의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임은 신보를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 일입니다. 신보라는 기관의 고객은 중소기업이지만, 임원들의 고객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출근이 설레고, 하루하루가 보람되며, 밖에서는 자부심 넘치는 신보를 선물하고, 조직에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는 ‘Chief Energy Officer(CEO)’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파이(π)형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과감히 도전하라”는 조언을 건넵니다. 초기에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부서나 대외 기관과의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파이(π)형 융복합 인재들이 결국 신보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원동력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2023년 신보가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설레는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복합위기와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신보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위기로부터 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보는 모든 사업의 확장적 기초를 유지하며, 보증 총량을 지난해 대비 9.4조원 확대한 89.7조원으로 설정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창업, 수출, 일자리 활성화 등 중점 정책 부문에도 총 53조원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일반보증 60.5조원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5.6조원을 적시에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21.2조원의 신용보험 인수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 경제의 최전선에서 중소기업 곁을 든든히 지켜왔던 신용보증기금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모든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로

BEYOND GUARANTEE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KDIT 신용보증기금



강원 혁신도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를 꿈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람들을 만나다 —

강원 혁신도시는 원주 지역을 우리나라 건강생명산업과 관광문화산업의 메카이자,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지원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강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계획도시이다. 이전 공공기관과 기존의 관광,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지식 기반 서비스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 역시 강원 혁신도시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는 2019년 강원 혁신도시로 기관 이전을 마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람들을 만나본다.

인간과 생명, 건강 중심도시를 향한 강원 혁신도시의 도약

강원 혁신도시 발전계획(2018년)에 따르면, 강원 혁신도시의 특화 발전방향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원주시에는 400여 개의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전국 의료기기 매출액의 22%, 수출액의 28.2%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 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인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을 계획이다. 기관이 보유한 장비, 기술 등을 지역기업, 대학 등과 공유하고, 기술 이전 및 기업활동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장, 구급차, 병원 등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1개이다. 강원도의 장기 비전을 반영하고 청정 이미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건강·생명 기능군 4개 기관이,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관광 기능군 2개 기관이 이전했다.

자원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개발 기능군 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군 3개 기관도 이전했다.



Mini Interview

회사와 가까워져 시간 여유가 생겼어요



신재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팀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 13년 차인데요, 입사 당시를 돌이켜보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영향으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제관리실에서 대내외 소통 및 협력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 생활을 소개해주세요.

강원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집과 회사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피로도가 확 줄었고, 시간 여유가 생겨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에 강릉, 제천 등 관광지가 많아 여행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야구,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1~2번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 좋습니다. 초반에는 혁신도시 안에 상권이 매우 부족해 주말이 되면 서울을 자주 갔지만, 점점 다양한 상권이 늘고 있어서 혁신도시에서도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평일 저녁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모이고 있어 이 부분도 이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원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혁신도시에서 업무하기는 어떤가요?

입사 5년 차에 원주로 오게 됐는데요,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업무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서 서울까지 출장길도 부담스러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혁신도시에서 꿈꾸는 미래는?

결혼하게 되면서 강원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 또한 원주에서의 삶에 만족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는 일상보다 때로는 여유를 갖고 옆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곳 혁신도시에서 일과 제 삶 모두 균형 있게 꼭 찬 하루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Mini Interview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더 사랑할 원주!

김태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 인사부 과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평원 인사부 김태연 과장입니다. 저는 심평원 본원이 서울 서초구에 있던 시절에 입사해 심평원의 원주 이전 후 정착 과정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제가 사는 강원 혁신도시와 저의 원주 적응기를 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전 전과 후의 생활환경을 비교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출퇴근 환경입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회사와 집이 가까워져 걸어 다니고 있는데, 쾌적한 공기,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걸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직주근접으로 인해 쾌적해진 출퇴근 환경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사실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회사 앞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회를 보거나,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보는 등 문화생활을 즐겼다면, 원주에서는 운동하거나 회사 근처의 도서관에서 독서하며 자기 계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로 온 후 걷기 운동에 매력을 느껴 하루에 1만 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짐은 물론이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미래 계획은?

저는 자가용 없는 두박이입니다. 그동안 가까운 거리는 걷고, 조금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아왔지만, 원주에는 대중교통으로 달기 힘든, 숨은 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주에서 7년 넘게 살았음에도 원주를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워 자가용을 마련하고, 원주의 명소와 곳곳에 숨은 맛집,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원주 내 좋은 곳들을 다니며 앞으로 살아가는 원주를 더 알아가고, 이 도시에 더 많은 애정을 담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심사·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온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평원의 역사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77년 출범한 '의료보험협의회'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지역·조합 단위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전 국민 대상의 단일 보장제도인 건강보험으로 확대하면서 2000년 7월 현재의 심평원이 출범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내 독립된 심사기구로, 보건의료 환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5년(1,145명)과 2019년(1,515명), 두 차례에 걸쳐 강원 혁신도시(원주시)로 이전했다. 강원 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다 인원이 이전한 기관으로, 지역사회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① 지역산업 육성,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지역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심평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기관이다. 전 국민의 진료정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정보, 의약품 유통정보 등 약 3PB(페타바이트, 1PB는 1,024TB(테라바이트))에 달하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의 약 30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빅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및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오픈캠퍼스, 강원 RIS(Region Innovation System), 빅리더 아카데미 사업, AI 공동개발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AI 공동개발 사업으로 스타트업(온택트헬스), 연세대학



2022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픈캠퍼스 활동(사진출처: 저자)

교(미래캠퍼스), 심평원 빅데이터 제공 등 협업을 통해 '진료 정보 기반 질환발병 위험도 시 예측 모델' 사업을 수주해 스타트 업체는 34억원을 투자유치했고, 대사성 질환 예방 관련 국민 의료비를 64억원 절감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에는 퇴행성 질환, 2024년에는 암 질환 모델 관련 의료 혁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심평원

심평원은 원주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사옥 내 운영 중인 카페 화경원의 장애인 음료 제조(사진출처: 저자)



2022년 강원 RIS 디지털 헬스케어 페스티벌 시상식 현장(사진출처: 저자)

먼저,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으로 장애인 운영 카페, 상생프라이데이, 직거래 장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사회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강원혁신물과 동반성장물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원들이 자발적 구매하면서 연간 2억원 이상 구매 성과를 달성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로컬푸드를 구매해 지역사회에 나누고, 구내식당 식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내식당 매월 1일 휴무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2년 로컬푸드로 김장 만들기 행사 후 홀몸어르신 나눔(사진출처: 저자)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 응급상황 교육 · 훈련(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협업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ESG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약사회, 민간 운송업체(민), 원주시(관), 심평원(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한 대외 공모전을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 건강 증진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사업을 추진했다.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은 증가 추세이지만 소아청소년과 같은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의사소통 문제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심평원은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문화가정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국어로 된 건강정보 홍보물을 제작 · 배포했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건강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소방서의 협조로 응급상황 대비 교육과 훈련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영월에 차량을 제공해 노약자에게 병의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우산 공유 사업,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중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니즈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혁머드는' 강원 혁신도시



손예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홍보기획부 대리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평원 솔밭 6년 차 손예진 대리입니다. 빅데이 터실에 입사해 공동데이터 모델 연구 지원 및 산학관 협력 빅 데이터 교육 운영 업무를 했고, 현재 고객홍보실에서 광고 제작 및 송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혜택이라면, 멍멍미 가득한 배우 이재훈님이 심평원을 애정하는 덕분에 3년째 광고 모델로 만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연애가 가능한가요?

연애 초반 원주 발령으로 경남~원주 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주 1회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는 치악산에 둘러싸여 있어 설산을 10분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 젊은 아주 직원을 타깃으로 한 감성 카페나 맛집도 많아서 서울 못지않게 트렌디한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기관 간 미혼남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한 분들도 많아 이곳에서의 연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업무는 어떠한가요?

이전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불편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회의문화 확산으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오히려 불요불급한 출장은 축소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도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산물 장터 운영, 문화행사 등 반대급부가 있어 즐기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간 심리적 연대감으로 이전보다 소통이 훨씬 수월해진 점도 업무 중 나름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서 꿈꾸는 미래는?

지난해, 연고 없는 이곳에 남편과 신집살림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전세지만 곧 은행의 힘으로 집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전 초기에는 수도권~원주 간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고, 상가 공실도 많아 공동화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반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직원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제 노후를 보내기에도 좋을, 제 2의 고향이 되어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 벼랑 끝의 아이들

사이버 폭력 목격 후 상담 및 신고율 4% 미만
무관심 속 사이버 폭력 혼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채용정보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모험 자본 공급,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로 고통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 220조원을 달성했으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 은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행은 신입행원, 전문·일반 계약직, 시간선택제,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용은 블라인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학교, 나이, 성별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NCS 기반의 필기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행원 채용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총 4단계 절차로 진행합니다.



배영민
중소기업은행
인사부 차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직무기술서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핵심가치 등을 참고해 작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제출 전,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학력, 나이, 성별 등을 기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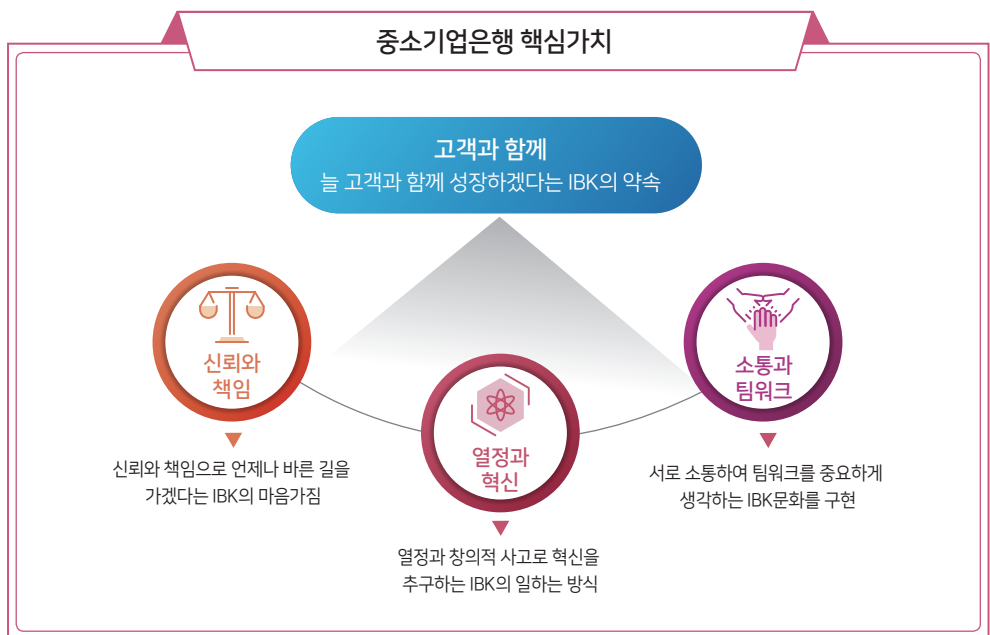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은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면접 전형은 1차 실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필기시험 과목별 문항 수, 출제 분야, 실기·면접시험의 평가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 및 NCS 채용기준을 준수하며, 어떠한 편견 요소나 자격요건 없이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기업은행 채용에 지원할 수 있고,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역할과 사업 분야, 채용 분야를 고려해 어떠한 직무역량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다양한 경험·경력·교육사항 등을 통해 해당 직무역량을 개발해 채용 과정에서 본인만의 이야기로 들려주신다면 IBK 신입행원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이 세상에 작은 인재는 없다



이원정 중소기업은행 여신기획부 재정기금팀 대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이원정 대리입니다. 현재 여신기획부 재정기금팀에서 정책자금 운영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현재 담당하는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정책자금이란 정책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직·간접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정책자금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여서 고객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담당자로서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상품을 개발하며, 이를 영업점 직원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국책은행의 일원으로서 기업금융전문가로 성장해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발전을 함께 만들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재학 중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활동의 어려움과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금융권에서 기업 금융에 가장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기업은행에서 직무역량을 키우고 싶었고, 기업금융전문가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주세요.

소통 능력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다양한 다른 부서·기관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특정 정책 자금 상품을 새롭게 기획하거나 기존 상품을 운영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의 담당자분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은행 고객님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인만큼 각종 규정과 법령을 기반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만족도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복지제도나 연수제도는 물론이고, '독서통신'과 사내 동호회처럼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합니다. '독서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신청해 독서할 수 있고, 사내 동호회를 통해 관심사가 같은 분들과 관심 분야를 학습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좋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거래업체를 방문해 고객님들께 상품을 설명해 드리고, 재테크 상담까지 진행해 드렸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업점 발령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수 과장님과 함께 퇴직연금 신규 상담을 위해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어 거래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기업은행과 거래를 새롭게 시작한 중소기업 고객님이셨는데, 퇴직연금을 설명해 드리고 직원분들께도 재테크 상담을 진행하며 도움을 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셔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행 전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막연히 일반 사기업보다 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행해 근무하다 보니 일률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유연하면서도 밝은 조직문화여서 활기찬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저를 포함한 직원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첫째, 회사와 직무에 대한 조사입니다.

IBK를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은 경영정보 등 회사와 직무 소개 자료를 많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나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많이 조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습득하면 할수록 채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정신·체력 관리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치거나 힘들 때, 재충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취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래달리기를 좋아해서 국토대장정이나 마라톤에 참여하곤 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원에서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오래 달리고 나면 후련해지고 체력도 쌓을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면 근처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시크릿’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도 굳건히 다짐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인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고 소중한 사람들이며, 각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채용정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보증·기술평가·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술이전·기술보호·지식재산공제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증기금은 직무 분야에 따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부문, 전산 부문, 채권관리 부문 등으로 나눠 채용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과 혁신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박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재도 모집합니다. 채용 절차는 완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역량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입사하는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서경민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대리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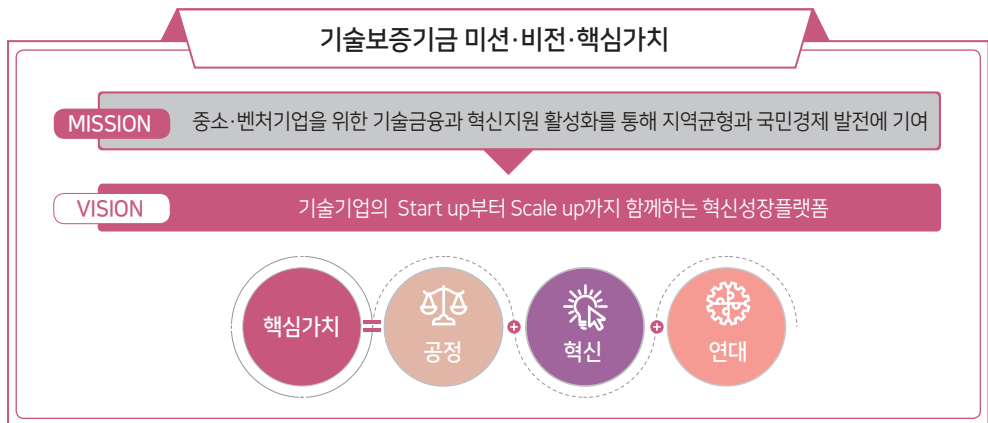
입사지원서는 지원 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점 등의 항목을 기재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인재상 및 핵심가치를 참고해 이공계, 상경계, 법학 직무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직무역량 중 강점 있는 능력은 강조하고, 부족한 능력은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나타내주시면 좋습니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모집부문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확인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5개 영역에서 출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능력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면접 전형은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토론면접 등 3가지로 구성된 1차 실무자 면접, 종합 적합성 면접으로 구성된 2차 임원 면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지식과 경력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연관 지어 표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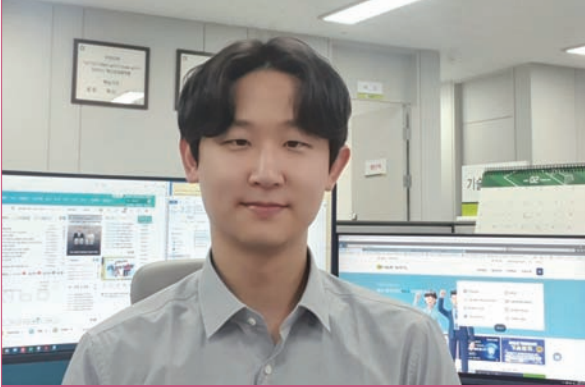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은 다방면의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과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는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소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고객을 대하는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매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결실을 보리라 믿습니다. 지원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오늘이 기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자



윤호성 기술보증기금 화성지점 대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화성지점에 근무하는 윤호성 대리입니다. 현재 기술평가, 기술보증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재 담당하는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수반되는 기업 조사, 기술평가, 보증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조사, 현장조사 등 기업 조사를 통해 기업신용을 분석하고, 기업이 사업화하는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기술평가모형(KTRS)을 활용해 평가하며, 중소기업에 여신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경제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결국 기업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생

각에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싶었고, 기보에 지원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청년기술평가체험단' 활동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보는 청년 구직자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탐방 후 체험기를 작성하는 청년기술평가체험단 활동을 운영하는데, 입사 전 체험단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을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보의 현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누는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보에서 일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주세요.

기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상경계·법학적 직무능력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보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공한 분야 외에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해 공학과 법학 지식이 부족했는데, 관심 있는 기술 관련 책을 읽고 「민법」 기초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융합형 인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담당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기업을 만나 다양한 기술을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러 기업을 심사하고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저에게는 생소한 기술 원리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알아야 할 지식이 많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여신을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 항상 꼼꼼하게 업무를 신



경 써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입사 후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많은 기업이 창업 초창기에 기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많은 자금을 확보한 상장사들도 초창기 기보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나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지원한 기업이 성장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재 하는 업무에 더 책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전에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산업별로 정말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보에 입사하고 알게 됐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정이 필요했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하고, 해당 제품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입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필기)는 단기간에 실력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본인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이 왜 입사하고 싶은지 본인만의 가치관

을 정립해 놓는다면 면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게 취업 준비는 막연하고 외로운 사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자신을 다독이며 나아가다 보니 미세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오늘의 노력을 믿고 하루하루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모든 순간이 쌓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지역인재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장 사다리

감사하지만 자랑스러울 수 없었던 모교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함께했던 친구들은 각자 본인이 꿈꿔 왔던 미래를 위해 대학교 진학을 상의하고 있었지만, 저는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장학금 지원 제도가 많은 한 지방 사립대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 장학금까지 받아 입학했습니다. 모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가끔 생활비를 모아 용돈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기에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랑스러운 모교가 아닌 감추고 싶은 이력서 한 줄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번 일어나고 101번 넘어진 취업 준비기간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는 취업 준비생이란 타이틀을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취업 준비카페에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이력을 한 줄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취업 준비기간을 돌아보면 세 가지 어려움이 대표적으로 생각납니다.

첫째,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대외활동은 서류 전형에 자주 등장하는 '본인이 난관을 극복한/목표를 달성한 등의 경험을 써주세요'라는 문항을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은 다섯 개 정도의 구성으로 다양한 경험을 돋보이기 위해 문항별로 학부활동, 대외활동, 인턴 경험 등을 겹치지 않게 작성하지만, 대외활동이 부족한 학생은 소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채용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저 또한 서류 전형 준비를 위해 대외활동을 탐색했으나 2학년 당시(2014년) 대기업·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대외활동은 대다수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도권 학생보다 추가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이동 시간을 지불하고서야 하나의 대외활동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취업정보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제 학부 재학 시절에는 지역인재 목표할당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지방대생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준비보다는 공무원을 권유하셨고, 학교 차원에서도 공무원 양성을 주도해 취업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서류부터 면접까지 실전에 부딪혀 하나하나 노하우를 스스로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한 경험으로 얻은 점도 많았으나 채



강민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재경영팀 전임연구원

용정보를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꿈을 함께 키우는 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취업 준비는 장기간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과정으로, 함께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 가면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친구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수능을 잘 보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친구조차도 점차 목표를 낮추어 아무도 대기업·공공기관을 바라보지 않고 중소기업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게 되었고, 홀로 하는 레이스 속 외로움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현실과 타협해 초봉이 높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입사했습니다.

넘어진 나에게 손 내밀어 준 지역인재 채용

중소기업 입사 후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 공공기관 입사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업무 성과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우선 공공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제안서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관리기관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만족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용역에 참여하며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해당 경험을 살려 기관 혁신경진대회에서 1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신 다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선배님

께서 정규직 채용 준비를 추천해 주셨지만 부끄럽게도 오랜 기간 실패하면서 좋은 회사는 좋은 학교 출신만 갈 수 있다는 편견에 선불리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던 선배님께서 지방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할당제가 있으니 출신대학 지역의 공공기관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운명처럼 정규직 준비를 결심하자마자 대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관리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명시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할당제는 위축된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고, 선배님도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팀 직원과 신규 입사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 직원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 내밀어야 할 때

현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청년인턴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 특성상 저희 회사 청년인턴은 지방 대생이 다수입니다. 인턴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지만 찾기 어려웠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채용 절차별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 고민했던 경험을 인턴은 겪지 않도록 원내 채용 담당자가 채용 절차, 출제 의도, 면접관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취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무경력 입사자, 청년인턴 후 입사자, 무기계약직 후 정규직 입사자 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이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비 지원부터 PT 면접을 위한 PPT 및 발표 교육, 인성면접 준비를 위한 면접 교육까지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사 초 부서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과제를 부여해 부서 업무 파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서 멘토를 1:1로 매칭해 출장 동행 등 실무를 체험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고경력 직원과 멘토링을 구성해 배움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업무 발표회 때는 공공기관 인사팀장님을 위원으로 섭외해 그분들의 시야에서 인턴 발표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은 매해 종료 후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청년인턴의 16%, 2022년 36%가 대기업·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성과

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이 주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취업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2021년 취업에 성공한 인턴이 2022년 인턴에게 지방대 인재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방대 출신인 제가 입사해 지방대생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혜택을 받은 인턴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을 건네준 것처럼 현재 채용된 지역인재들은 앞으로 더 큰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도권 학생의 입장에서 지방인재 목표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인재 목표할당제는 지방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생의 빛이 수도권 학생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 외에도 여러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나간다면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모두에게 따뜻함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지역인재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

~답게 행동하는 사람

1년 정도의 취업 준비생이라는 신분에서 취업 준비생답게 행동하며 제게 주어진 일들을 차근 차근 달성해 결국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방이라는 제약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저라는 가치를 키워 나갔고,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단점을 장점으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유년시절과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행동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학 학생들보다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지방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복데이 홍보대사, 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전라북도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 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여러 관점을 배울 수 있

었고,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 자신감

취업의 방향성을 잡게 해 준 활동은 지역선도 대학 육성사업단이 주최한 이전 공공기관 멘토링이었습니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지역(전북) 인재 채용 목표 30%라는 수치는 결과적으로 지역인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3년에 전북으로 이전한 다음 제 주변에 많은 분이 입사했고, 문득 '어? 너도 입사했네?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취업 준비를 하며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저를 다잡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인 취업 준비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확대되며 교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에 걸맞은 지역인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활



김하람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주임



성화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활용한 제도는 교내 '기업의 달인 되기'라는 활동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입사한 분들로부터 들은 직무 설명과 실무 관련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취업 준비에 있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업의 달인 되기를 통해 지적측량 직무가 저와 잘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부터는 지적측량 직무로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활용한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지적기사 실기 준비생을 위한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직무의 경우,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 관련 자격증이 필수자격요건입니다. 지적기사를 준비하며 1차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실기의 경우 측량 실무에서 쓰는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고 결국 낙방했습니다. 2차 실기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차 실기 준비생을 위해 토탈스테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평판측량과 토탈스테이션을 활용한 측량을 해 볼 수 있었고 다음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이 맺어 준 인연이 결국 입사 동기가 되다

지역인재 육성사업단이 주최한 멘토링을 통해 저와

같은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를 위한 공채 대비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필기 전형은 전공 70%, NCS 30%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전공공부 위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과목별로 문제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놓고 문제를 풀었고 1년 동안의 이런 노력들은 입사 시험을 볼 때 긴장감을 풀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과 문제를 풀며 오답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선의의 경쟁의식이 생겨 다음 스터디에서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갔고 저희 스터디원 6명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마지막 단계인 면접 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스터디를 활용해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지원한 기업을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기업 분석, 기업의 방향성, 기업 이슈들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가져온 정보만으로 직무에 관련된 답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멘토링을 통해 만났던 현직자 멘토에게 연락해 측량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측량이 어

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업무 절차 등과 같은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2주 동안 스터디원들과 매일 같이 만나며 면접을 준비했고, 그 결과 스터디원 6명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동기가 되어 지금은 전국 여러 지사에서 국민에게 편리한 국토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많은 분의 노력은 저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프라 + 지역인재 + 다양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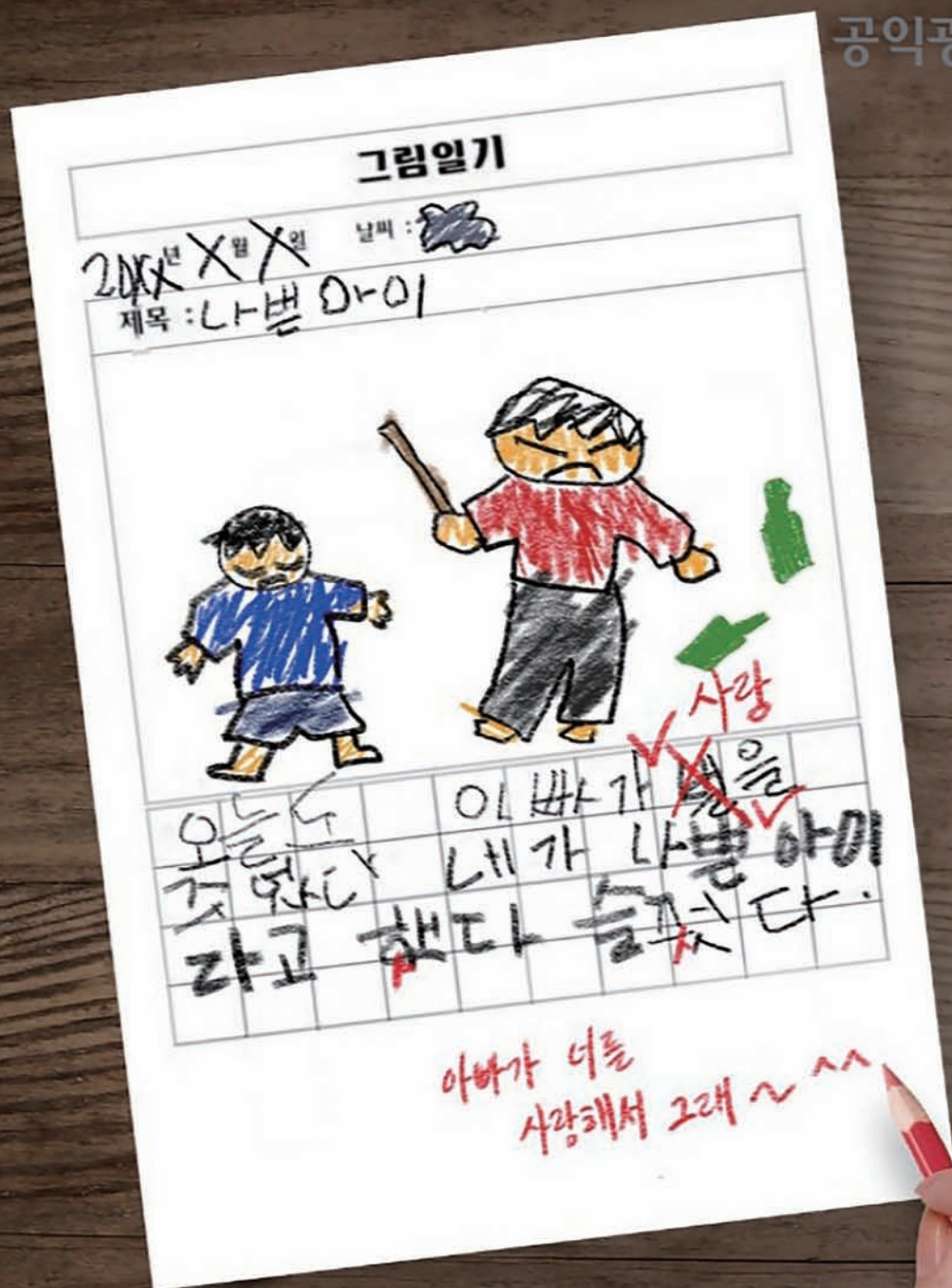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 인구의 약 50.4%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저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인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단순히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

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슷한 분야의 기업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국제금융 중심지 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업의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되고, 이는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지역인재

취업 준비 과정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나는 못 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 한 번 해 볼까? 해 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저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힘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지역인재라는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 또한 지역인재로서 국민에게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1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stitutions & Policy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창간호 원고 모집 안내

원고 접수 기한 2023년 5월 8일(월) 24시

연간지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이
학술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은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고분야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부정책
(기능 · 사업)과 운영(지배구조 · 인사 · 조직 · 재무회계 · 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분야

기고자 자격 및 원고 작성 방법

기고 자격 : 제한 없음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15매 내외)

편집 양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공지사항 내
논문모집공고 확인

* 별도의 심사료, 게재료 없음

논문 게재 일정

원고마감일 : 2023년 5월 8일(월) 24시 까지

게재확정 : 2023년 6월 초

발행예정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담당자 : 강혜진 연구원

Tel: 044-414-2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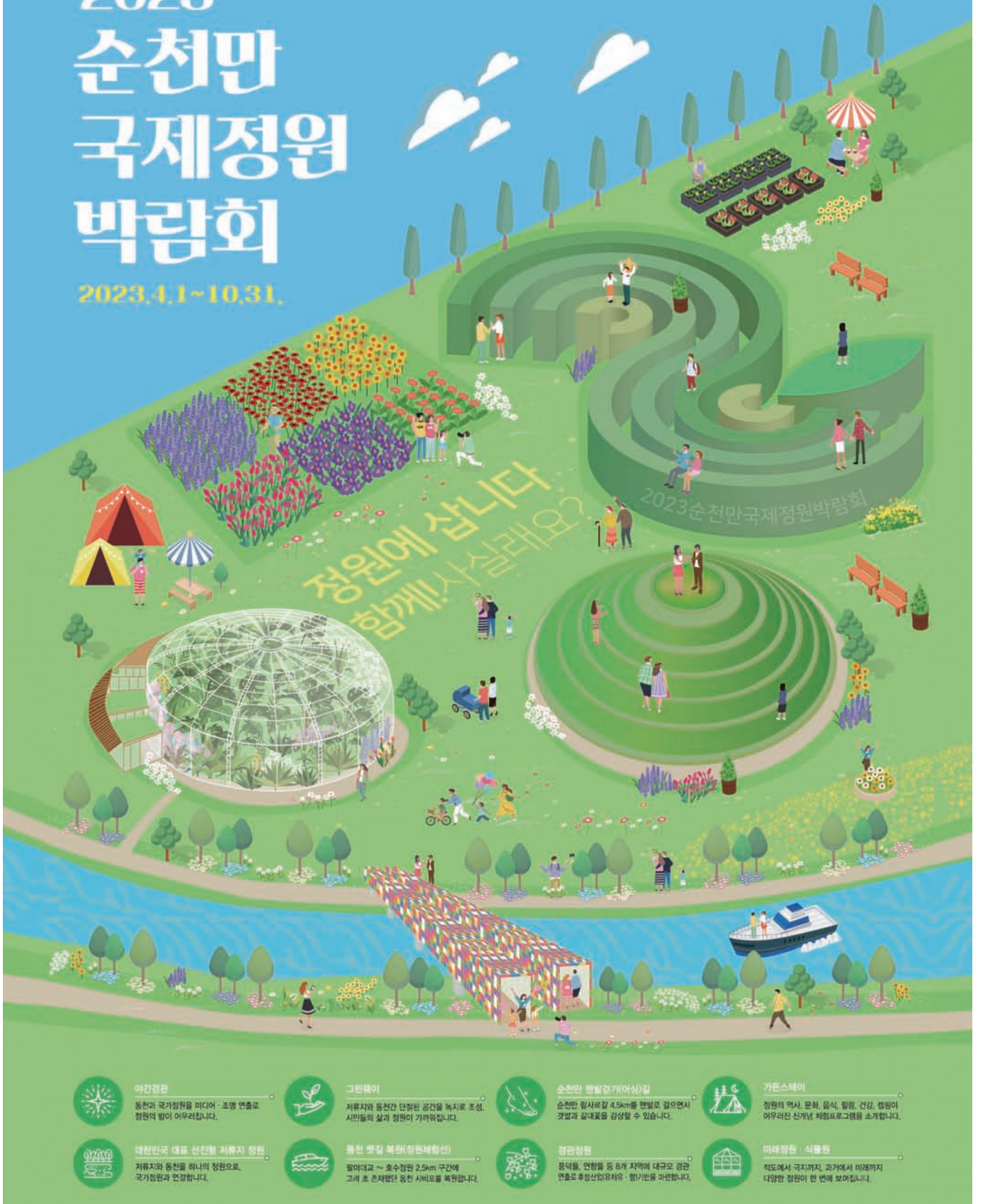
E-mail : publicins@kipf.re.kr

기고 방법 및 원고료

publicins@kipf.re.kr으로 기한 내 논문 기고 및 문의
게재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 원고료 지급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3.4.1~10.31.



아간정원

동천과 국가정원을 미디어·조명 연출로
장원의 힘이 어우러집니다.



그린웨이

저류지와 동천간 단원빈 공간을 녹지로 조성.
시민들의 삶과 정원이 가까워집니다.



순천만 팻말길(어상)길

순천만 할사포길 4.5km를 한발로 걸으면서
갯벌과 길대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든스테이

정원이 역사, 문화, 음식, 힐링, 건강, 체험이
어우러진 산개념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진형 저류지 정원

저류지와 동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국가정원과 연결합니다.



동천 뱃길 복원(정원재형성)

뱃머데교 ~ 호수정원 2.5km 구간에
그레프 조운재발단 동천 서비스를 복원합니다.



경관정원

풍석동, 연항동 등 8개 지역에 대규모 경관
연출로 후생산업유치유·행기만을 마련합니다.



미래정원 '식물관'

적도에서 극지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다양한 정원이 한 번에 보여집니다.